
2021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ZOOM 회의

2021. 3. 3(수) 19:00



회의 및 자료집 순서

대회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회순통과

안건사항

- | | |
|-----------------------------------|------|
| 1. 2020년도 사업보고 승인 및 평가(안) 심의·의결 건 | P5 |
| 1) 2020년도 사업보고 | P5 |
| 2) 2020년도 사업평가(안) | P144 |
| 2. 2020년도 결산(안) 승인 및 감사보고 승인 건 | P150 |
| 1) 2020년 결산(안) | P150 |
| 2) 2020년 감사보고 | P151 |
| 3.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건 | P153 |
| 1) 2021년 사업계획(안) | P153 |
| 2) 2021년 예산(안) | P172 |
-

기타안건

회의록 채택

광고

폐회 선언

참고자료

정의당전북도당 규약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명단

성원확인 : 총원 36명, 사고 2명, 재적 34명, 의결정족수 18명

1. 전북도당(5)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오형수	전주	위원장	최장호	완주	부위원장
허옥희	전주	부위원장 전주시의원	한상구	전주	부위원장 청년학생위원장
김민아	전주	사무처장			

2. 지역위원회 위원장(4)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정지숙	군산	군산시위원장 군산시의원	권태홍	익산	익산시위원장
서윤근	전주	전주시위원장 전주시의원	한병옥	정읍	정읍시위원장

3. 지방의원(3) *중복인원 제외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최영심	전주	전북도의원 민생위원장	김수연	익산	익산시의원 전국위원
유재동	익산	익산시의원			

4. 전국위원(2) *중복인원 제외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안윤정	군산	전국위원	이찬영	전주	전국위원 청소년위원장

5. 당대회 대의원(17)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김소영	군산	당대회 대의원	서효정	전주	당대회 대의원 성소수자위원장
전일갑	군산	당대회 대의원	양복심	전주	당대회 대의원
석동현	완주	당대회 대의원	임형준	전주	당대회 대의원
신명진	완주	당대회 대의원	정해선	전주	당대회 대의원
김건오	익산	당대회 대의원	정회준	전주	당대회 대의원
김세미	익산	당대회 대의원	최민성	전주	당대회 대의원
김종화	익산	당대회 대의원	박진영	정읍	당대회 대의원
박수연	익산	당대회 대의원	장은실	정읍	당대회 대의원
이재민	익산	당대회 대의원			

6. 전북도당 부문·과제별 위원장(5) *중복인원 제외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고양곤	전주	문화예술위원장	이종진	전주	농민위원장
심지선	군산	장애인위원장	정광수	전주	노동위원장
염경석	전주	정책위원장			

안전1

2020년도 사업보고 승인 및 평가(안) 심의 의결 건

주문사항 : 1. 2020년도 사업보고를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20년도 사업평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정의당 전북도당 규약 제13조 1항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전의 심의, 의결
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1. 2020년도 사업보고

◆ 순서

1. 일자별 활동보고
2. 의정활동보고
3.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4. 부서별 사업보고
 - ① 언론사업
 - ② 조직사업
 - ③ 교육사업
 - ④ 홍보사업
 - ⑤ 총무사업
 - ⑥ 연대사업

1] 일자별 활동보고

일 자	활 동 내 역
1/02(목)	11:30 권태홍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1/03(금)	당사 이사
1/06(월)	09:00 호남권 시무식-5.18묘역
1/07(화)	전북민중행동 신년 하례회 - 농업인회관 군산시지부 시민선거인단 모집 설명회 전북대병원노조 선거인단 설명회 민주노총 운영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중앙당
1/08(수)	사무처장단 연석회의-중앙당
1/11(토)	15:00 오형수후보 출판기념회-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강당
1/13(월)	10:00 시민선거인단 모집 집중캠페인-현대차 전주공장
1/14(화)	11:00 현대차 전주공장 이취임식
1/17(금)	13:00 호남권 회계실무교육 13시-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 18:30 군산당원모임-시골밥상
1/21(화)	19:00 도당운영위-도당사무실
1/22(수)	19:00 예결산위원회
1/28(화)	16:00 민주노총-진보정당 간담회
2/5(수)	16:00 전북여성대회-성평등전주
2/6(목)	18:00 선관위회의 11:00 해수유통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11:30 공공의대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2/7(금)	16:30 도청 시설미화 정기집회
2/9(일)	14:00 전국위원회
2/11(화)	10:00 김제 희생노동자 진상추구 기자회견 19:00 도당운영위
2/12(화)	11:00 장애인위원회 정책간담회-최영심의원실 13:30 장애인정책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16:00 전북여성대회 조직위 회의-성평등전주
2/14(금)	11:00 유치원 기간제교사 고용안정대책추구 기자회견 14:00 전북평화회의
2/17(월)	14:30 호남권 3당 합동기자회견-광주시의회
2/18(화)	11:00 비례후보 염경석 출마기자회견-국회 정론관 19:00 정의당 전북도당 정기 대의원대회-민주노총 중회의실
2/19(수)	11:00 군사훈련 중단추구 전북 시민사회 기자회견-도청
2/20(목)	10:00 정의당 전북 현장상무회의-도의회 세미나실 16:00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전교조 회의실 19:00 전북겨레하나 정기총회-중부비전센터 19:00 전주시위원회 운영위원회-사무실
2/25(화)	10:30 도청 시설 미화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비정규 이제 그만
3/01(일)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선거 온라인투표

(3/01~3/04)

3/03(화) 10:00 권태홍(익산을)예비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3/04(수) 10:30 오형수(전주을)예비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13:00 임시 운영위원회의(전자회의)

3/05(목)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선거 현장투표
(09:00~20:00)

3/06(금)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선거 ARS투표
(09:00~18:00)

3/10(화) 19:00 군산시위원회 당원모임-미곡창고

3/12(목) 11:00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기자회견 - 도청

3/13(금) 17:00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투쟁 3보1배 - 도청

3/15(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제21대 총선 및 진안군수, 전주시의원, 군산시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차)

3/17(화) 19:00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의-도당 사무실
10:30 영광핵발전소 한빛3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도청

3/18(수) 10:00 전북선관위 방문
1:00 건설노동자 5대의제 27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고용노동부
16:30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선포결의대회 - 도청

3/19(목) 10:00 상용차 산업위기 극복 총선 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3/20(금) 진보정당 간담회

3/23(월) 11:30 도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17:00 전북민중행동집행 대표자회의-민주노총

3/25(수) 10:00 오형수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22:00 KBS 걱정당 선거대책 토론회

3/26(목) 19:40 총선전략 KBS 생방송
11:00 코로나19 비상대책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3/27(금) KBS 여론조사(4/27~4/29)
15:00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전북행동의 날-전북도청

3/30(월) 10:30 민주노총 진보정당 후보지지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3/31(화) 11:00 4.15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11:00 오형수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4/01(수) 11:30 정상모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22:00 KBS 토론회-권태홍후보

4/02(목) 18:00 토론회-정상모후보

4/06(월) 14:00 KBS 토론회-오형수후보
18:30 JTV 토론회-권태홍후보

4/07(화) 08:30 패트론허전북 토론회-정상모후보
10:30 총선후보 합동 기자회견

4/08(수) 08:30 패트론허전북 토론회-염경석후보
17:30 MBC토론회-정상모후보

4/10(금) 15:00 JTV토론회-염경석후보

4/14(화) 10:30 총선후보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

4/15(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4/16(목) 11:30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풍남문광장
 4/17(금) 10:30 오리온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익산노동지청
 4/21(화) 19:00 선대본 해단식-돼지막서신점
 4/22(수) 10:30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민주당사 앞
 4/23(목) 11:00 노동절 조직위 기자회견-도청 브리핑룸
 4/24(금) 16:00 공공운수노조 전북도청 투쟁승리 결의대회
 4/27(월) 11:00 전)장애인협회장 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전주지방검찰청앞
 4/28(화) 19:00 전북도당 운영위-당사
 4/29(수) 16:00 민주노총 전북본부 면담요청 거부 도지사 규탄 집회
 5/01(금) 14:00 2020 세계노동절 130주년 행사-전북도청 사거리
 CBS전주방송 사람과 사람 대담 , 염경석,정상모
 5/02(토) 15:00 도청 민주노총 전북본부 면담요청 거부 도지사 규탄 집회
 5/04(월) 16:00 도청 민주노총 전북본부 면담요청 거부 도지사 규탄 집회
 5/06(수) 16:00 도청 민주노총 전북본부 면담요청 거부 도지사 규탄 집회
 5/07(목) 14:00 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10:00 전북학생인권침해 관련 도교육청 면담-도교육청
 5/08(금) 16:00 민주노총 전북본부 면담요청 거부 도지사 규탄 집회
 5/09(토) 11:00 정의당 총선 지역구 출마자 대회
 5/11(월) 박선희 정책국장 중앙당 파견(5/11~5/15-5일간)
 5/12(화) 18:30 예결산위원회 감사 - 도당사무실
 5/14(목) 14:00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 정의당 중앙당
 17:00 제1차 당기위 전자회의
 (당기위원장-문병학당원)
 5/15(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성명서 발표
 5/18(월) 14:00 5.18묘역 참배-전주월드컵경기장 출발(중앙당과 행사)
 19:00 전북도당운영위
 5/19(화) 10:30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당사자! 무자격 인권위원! 퇴출촉구
 기자회견-도청앞
 5/20(수) 14:00 전국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5/25(월) 16:00 전북민중행동집행위원회-민주노총전북본부
 5/27(수) 10:30 전북대의대생성폭력사건 의료인 성범죄 전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전주지방법원
 6/03(수) 14:00 사무처장단 연석회의 참석
 6/04(목) 11:00 환경의 날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 촉구 기자회견-전북도청
 6/05(금) 09:30 종교계성폭력 가해자 윤00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주지방법원
 11:00 '전북의대생성폭력사건' 항소심선고 관련 의료인성범죄 전북
 대책위 기자회견-전주지방법원
 14:00 '한국전쟁 종식 평화캠페인' 제안 간담회-민주노총전북본부
 6/08(월) 12:00 전북 기자단 간담회
 6/12(금) 13:00 2022위원회 회의
 16:00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과 대안 마련 토론회

	-민주노총전북본부
6/15(월)	10:00 6.15공동선언 20주년기념 토론회-전북대
6/17(수)	19:00 익산시위원회 운영위
6/18(목)	19:00 청학위-혁신위 간담회-도당
6/19(금)	11:00 혁신위-소위원회 회의- 도당
6/20(토)	14:00 혁신위 간담회-민주노총 전북본부
6/22(월)	11:00 전북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촉구 기자회견 -전주지방법원 앞
	10:00 불법 잼버리 부지 매입 중지 및 친환경 잼버리 촉구 기자회견 - 도청
6/23(화)	11:00 성범죄 가해의원 옹호집단 민주당 규탄 및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 민주당전북도당
	14:00 공공의료 1차 워크숍 - 완판본 문학관
	16:00 한일노동자연대운동 사례 경청회 - 민주노총전북본부
	19:00 도당 운영위 -도당
6/24(수)	11:30 한반도 종전 캠페인 공동 기자회견-도청앞
6/25(목)	14:00 시민인권학교-성평등 전주 커뮤니티홀
6/26(금)	14:00 전북 2022기획단 회의
	17:30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개소식
6/29(월)	11:40 등록금반환 3차 추경 반영 요구 1인시위-전북대앞
	14:00 전북민중행동 대표자, 집행위 회의
6/30(화)	10:0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기자회견-전주시청
	11:40 등록금반환 3차 추경 반영 요구 1인시위-전북대앞
7/01(수)	10:00 이스타항공 이상직규탄 기자회견 - 도의회
	11:40 등록금반환 3차 추경 반영 요구 1인시위-전북대앞
7/02(목)	10:00 전북인권 침해 사례 발표-도청
	11:40 등록금반환 3차 추경예산 반영 요구-전북대앞
7/03(금)	09:00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강연 기획 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
	11:40 등록금반환 3차 추경예산 반영 요구-전북대앞
	14:00 전라북도 선관위 방문
7/04(토)	14:00 인권교육-민주노총 대회의실
7/07(화)	08:30 미투 1인시위
	10:00 임시 온라인 도당운영위
	14:00 공공의료 2차 워크숍
	22:00 KBS전주 심층토론 출연(사무처장)
7/09(목)	10:00 공공의료 기자회견-도청
	10:30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도의회
	12:0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회의
7/10(금)	10:30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기자회견-스페이스코워
	16:00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강연-민주노총 전북본부
7/11(토)	13:00 전구 위원장단 워크숍 - 국회
7/14(화)	10:00 전북평화회의 대표자회의-도의회
	18:30 전북겨레하나 이전 집들이

7/15(수) 08:00~09:00 차별금지법 출근캠페인-전주종합경기장
 09:30 전북형 그린뉴딜 기획 모임-전북환경련
 11:00 스쿨미투 2차 가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도교육청
 12:00 당-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담회
 7/16(목) 08:00~09:00 차별금지법 출근캠페인-전주종합경기장
 19:00 신입당원 교육-당사
 7/17(금) 08:00~09:00 차별금지법 출근캠페인-전주종합경기장
 7/18(토) 11:00 고 노회찬의원 추모제-마석모란공원
 17:30 전북도당 운영위-민주노총 중회의실
 7/21(화) 19:00 혁신위 토론회 -민주노총 중회의실
 7/22(수) 11:00 이재용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전주지방검찰청
 11:30 전라북도의회 나인권의원 사죄 요구 1인시위
 16:00 민주연합노조 집회-시청앞
 7/23(목) 11:00 송하진지사 규탄 기자회견-전북도청
 11:30 전라북도의회 나인권의원 사죄 요구 1인시위
 7/24(금) 11:30 전라북도의회 나인권의원 사죄 요구 1인시위
 14:00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회의 대표자회의-민주노총
 7/25(토) 14:00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도민행동 - 군산미군기지신정문
 7/27(월) 10:00 한반도 평화선언 기자회견-남문광장
 11:30 전라북도의회 나인권의원 사죄 요구 1인시위
 17:00 전북민중행동 집행위-민주노총
 7/29(수) 10:30 차별금지법 기자회견-전북도의회 앞
 11:00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전북도청 앞
 7/31(금) 11:00 익산 성폭력목사 엄중처벌 기자회견-전주지방법원앞
 8/01(토) 11:00 고 김인봉선생님 10주기 추모제-장수
 8/04(화) 14:00 사무처장단 연석회의-중앙당
 8/05(수) 10:00 무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전북도청 현관 앞
 8/11(화) 11:00 코로나 공공의료 기자회견-전북도청광장
 22:00 전주 KBS 심층토론 도당위원장 출연
 8/12(수) 16:00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회의-ZOOM
 19:00 전주KBS 이슈K 최영심의원 출연
 8/14(금) 10:00 섬진강관리단 방문
 12:0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기자회견-풍남문 광장
 20:50 전주MBC 14천리 - 최영심의원, 한상구위원장, 사무처장 출연
 8/15(토) 10:00 8.15민족자주 전북대회-군산미군기지
 14:00 전국위원회의-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8/18(화) 19:00 도당운영위-사무실
 8/19(수) 16:00 무주 장애인시설 부지사 면담-도청
 8/20(목)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민주노총
 8/21(금) 13:30 그린뉴딜 토론회-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
 8/22(토) 07:20 전주MBC 시사토론(염경석위원장 출연)

8/23(일) 10:00 정의당 제9차 온라인 정기당대회 1차회의
(유튜브 생중계 및 전자투표)

8/24(월) 16:30 전북도청 행정부지사 방문

8/25(화) 07:30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버스 전북방문-익산역
11:0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민주당 전라북도당 앞
14:00 선거관련 시도당 담당자교육-중앙당(화상교육)
17:30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풍남문광장

8/26(수) 11:00 장애인위원회 기자회견-전북도청 현관앞
11:30 심지선위원장님 1인시위-도청

8/27(목) 14:00 정의당 민생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화상회의

8/30(일) 10:00 정의당 제9차 온라인 정기당대회 2차회의
(유튜브 생중계 및 전자투표)

8/31(월) 14:00 전북민중행동 집행위-민주노총

9/01(화) 10:00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ZOOM)
19:00 전북선관위의회의(ZOOM)

9/02(수) 14:00 10월 해원제 준비위 회의-민주노총 대회의실

9/04(금) 11:00 의사 집단휴진 규탄 기자회견-전북대병원

9/06(일)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선출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운동기간
(9/06~9/21)

9/0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9/07~9/08)
16:20 전북도청 대외협력국장 방문인사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9/08(화) 10:00 이테크건설 부당노동행위 및 고공농성 침탈 규탄 기자회견-
전북도청

9/09(수)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9/09~9/10)
11:00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이상직의원 규탄 기자회견
13:30 차별금지조례제정 환영 기자회견-전주시청

9/11(금) 전국동시당직선거운동(9/11~9/21)-토론회,유세
14:30 이테크건설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강은미의원 방문)

9/15(화) 09:00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조례 심의 피켓시위
14:00 이테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군산시지부

9/21(월) 16:00 비정규직이제그만 대표자회의
17:00 전북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 연석회의

9/22(화) 11:00 이테크건설 노동자탄압 규탄 기자회견-전라북도경찰청
14:00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파기 규탄 기자회견-전북도청

9/23(수)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투표(9/23~9/26)
10:00 전주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총회
16:30 전북문화예술계 교수 성폭력사건 방청연대-전주지방법원

9/28(월) 15:00 편의점주 불공정 노동형태 토론회-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9/29(화) 10:00 군산평화바람 군산미군기지 하제마을문화제 준비 연대

10/05(월) 당대표결선투표(10/05~10/09)

10/06(화) 11:30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 전수조사파기 전라북도청 규탄 피켓시위
14:00 전북장애인 탈시설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라마다호텔

10/12(월) 11:00 전북고속 친일행위 규탄 기자회견-전주시외버스터미널

- 10/13(화) 10:00 낙태죄 전면폐지 요구 기자회견-전북도의회
10:30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용역에 대한 기자회견-도청
11:00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기자회견-도청
12:00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간담회-도청
- 10/14(수) 10:30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자회견-전주교도소
11:00 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교수 징계촉구 기자회견
- 10/15(목) -전주대
12:00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집행위원회
- 10/19(월) 08:00 전북고속 친일행적 규탄 1인시위-전주시외버스터미널
14:00 전북민중행동 집행위원회-민주노총전북본부
16:00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회-민주노총전북본부
- 10/20(화) 10:30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파기 규탄 기자회견-도청
- 10/22(목) 10:00 전북상용차산업 대책 마련 기자회견
- 10/23(금) 08:00~09:10 전주대 박교수 처벌 1인시위-전주지방법원
18:30 전태일 50주기 연극 공연
- 10/24(토) 12:00 한국전쟁 70년 합동 추모제-순창 회문산
- 10/25(일) 13:00 활동가 기본교육-왕의지밀
- 10/26(월) 11:30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반대 기자회견-전북도청
14:00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대표자, 집행위 연석회의
- 10/27(화) 11:30 무주하은의집 1인시위-전북도청앞
- 10/28(수) 14:00 전주대 박교수 선고재판/기자회견-전주지방법원
15:00 미투 전북행동 집행위
- 10/29(목) 11:00 현대자동차 노조 간담회
16:30 공공운수노조 투쟁 승리 결의대회-풍남문광장
- 10/30(금) 15:30 군산미군기지 하제마을 팽팽문화제
10:00 전북현안대응 기자회견-도의회
- 11/02(월) 10:30 농성장방문
11:00 현대자동차,타타,평등노조 간담회
16:00 미투전북시민행동 집행위
19:00 민주노총전북본부 기호1번 선대본 출범식
20:00 무주 하은의집 대책위
- 11/03(화) 12:00 한국전쟁 70년 추모제 결산회의
- 11/04(수) 11:00 현대자동차 정치후원금 1차 캠페인
16:00 전주대 총장 면담(박교수 관련)
17:00 공공운수 노조 평등 결의대회-도청
- 11/05(목) 14:00 사무처장단 연석회의
- 11/06(금) 11:00 전북돌봄전담사 파업 결의대회-도교육청
14:00 광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 11/08(일) 10:00 전주시위원회 가을소풍
- 11/09(월) 10:00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후원금 2차 캠페인
17:00 미투전북행동 집행위-ZOOM
- 11/10(화) 10:30 장혜영의원·무주하은의집 대책위 간담회-당사
11:00 노동법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기자회견
12:00 장혜영의원 초청강연회-전북대상대1호관
15:30 민주연합노조 호남집중 집회-전주시청

	17:00	전태일 3법 쟁취 캠페인-풍남문광장
	17:30	전북도청 승리집회-도지사관사
11/11(수)	11:00	전북민중대회 준비위 회의
11/12(목)	10:00	선관위 점검
11/13(금)	11:30	무주 하은의집 1인시위-도청
	14:00	전북민중대회 집행위-민주노총전북본부
	18:00	류호정의원 강연회-전북대 상대1호관
11/14(토)	14:00	전북노동자대회-민주당사
	18:00	완주군의회 모니터링단 준비모임
11/15(일)	14:00	전국위원회-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20:00	무주하은의집 대책위 회의
11/18(수)	10:00	전북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
	11:00	SK 브로드밴드 규탄 전북노동사회 기자회견
	12:00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7:00	전태일3법 제정 촉구 선전전
	17:00	전주대 성범죄 박교수 관련 면담
11/19(목)	10:00	정치후원금 조직 관련 현대자동차 방문
11/20(금)	10:00	정치후원금 조직 관련 공공운수노조버스지부 방문
11/21(토)	14:00	동네방네 기후행동-충경로
11/23(월)	10:00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16:30	전북민중대회 집행위
11/24(화)	12:00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간담회
11/26(목)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16:00	전북민중대회
11/27(금)		위원장님 도청단식 연대
	09:30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
	16:00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
	19:00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
11/28(토)	17:00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회의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선전전
11/30(월)	11:00	송하진도지사 규탄 전북원로 기자회견
	14:00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 전체회의
	17:00	도청노동자 투쟁 승리 긴급집회
12/01(화)	08:00	차별금지법 출근선전전
12/02(수)	08:00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출근선전전
	11:00	이상직의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4:00	무주하은의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집회
12/03(목)	10:00	전북민중대회 조직위 집행위원회
	16:00	무주하은의집 해결 촉구 도청 천막농성
12/04(금)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12/07(월)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11:00	송하진도지사 규탄 연설회-모래내시장 네거리
12/10(목)	11:00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2/11(금)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12/14(월)	12:00	전북도당 집행위원회

12/15(화)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12/16(수)	11:00 송하진도지사 규탄 연설회-세이브존 앞 15:00 전북 장차연(준) 집행위
12/18(금)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송천역 네거리
12/22(화)	11: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식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2/23(수)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전주)
12/24(목)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약촌오거리(익산)
12/28(월)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KT(효자동)네거리 17:00 전북민중행동대표자 집행위 회의
12/29(화)	11: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식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2/30(수)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0:00 허옥희의원 기자회견-전주시청브리룸 14:00 전북탈핵연대 대표자/집행위회의-ZOOM
1/04(월)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KT(효자동)네거리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전북도청 16: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퇴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05(화)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KT(효자동)네거리 16: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퇴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06(수)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전주) 11:00 전북민중행동 신년 기자회견 16: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퇴근선전전-전주종합경기장
1/07(목)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KT(효자동)네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정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영등동 하나은행 사거리(익산) 15:30 민주연합노조 집회-전주시청 16: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퇴근선전전-한국은행 교차로
1/09(금)	10:00 활동가 기본교육-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
1/12(화)	19:00 도당 회계감사
1/14(목)	11:00 도연맹 15:00 민주연합노조 방문
1/15(금)	15:00 전북장차연 총회 18:30 완주지역위 간담회
1/18(월)	10:00 도당운영위(전자회의)

② 의정활동보고

최영심의원	
4/14	어린이재활센타를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도비출연 설립추진 면담
16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27	〈코로나 19 관련 예술인지원〉국비매칭사업 외 도비 4억 확보
29	〈해고 없는 도시〉실현 관건은? 주제로 생방송 출연
5/8	① 전라북도 누구를 위해 행정하는가? 도청 정문 폐쇄와 공무원 임금저하 및 노동감수성 없는 전라북도청에 관한 5분 발언
	② 이천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12	〈이슈옥타곤〉출연 도청의 불통행정에 대한 문제점 문제제기 함
28	10시 전북도지사 면담 실시
	14시 배달의 명수 앱 관련 간담회 실시
31	화물연대 대대 참여
6/9 ~ 24	예산 결산 심의 및 도정질의 기간
11	도정질의 도청 노동자 정규직전환 관련 현안 질의 65세 기준 활동보조인 시간 확대 적용 활동지원 복지사각 없어야. 교육청 돌봄 노동자 관련 현안질의.
19	mbc시사토론 패널참가 (진화하는 사기범죄 ..막을 수 없나?)
20	도당 혁신위 회의 참석
22	교육청 부교육감 정책질의 (돌봄근무시간 확대 방안, 교육공무원 안전공제 관련 질의) 〈패트를 전북〉출연 - 도청의 불통행정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함
25	도청 근로 - 노동 용어 일괄정비 개정안 통과
29	학교 강당청소 환기시설만 해놓고 청소도 시행안하는 학교...등 문제제기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 계획적인 청소 시행 요구
7/01	교육위원회 상임위 변경
03	서신초 방문 민원 청취
09	전북도당 차별금지법 촉구 기자회견 참석
10	마을 계획추진단 위촉식 및 간담회 참석
14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간담회 개최 마을 계획추진단 부단장 면담 및 민원 청취
15	서신초 학교 밖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민원 청취 참가단위 : 전북도청 교통계, 전주시청 교통계, 완산경찰서 교통계 전북교육청, 전주교육청, 안전관리공단
16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부결 처리
18	평화와 인권연대 간담회 진행
23	전북도 심지선 장애인위원장 면담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릴레이 간담회 진행
29	육성회직, 사무실무사 직종 간담회 진행
30	돌봄전담사 직종 간담회 진행
31	방과후 코디 직종 간담회 진행
9/10	교육공무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차별금지법 토론 참여
18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 관련 교육청과 간담회 실시
23	이스타항공관련 문제해결 및 이상직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참여

- 24 전태일3법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참석
- 28 특수고용노동자 차별금지 및 고용보험 촉진 도청 앞 기자회견 참석
전주교육청 안전한 통학관련 협의회 참석
- 29 조례 개정안 3건 발의
-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권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접수
 - 전라북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접수
 - 전라북도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접수
- 6 무주 하은의집 관련 장애인복지과장 면담
- 8 생활임금관련 민원인 면담 , 서일초 방문
- 15 어린이재활센터관련 예수병원 간담회 실시
- 10일, 20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간부 간담회 참석
- 9/21 11시 새만금해수유통 기자설명회 참석
14시 전북형 공공앱관련 간담회 참석
- 22 도청 상용차 기자회견 참석
- 23 본회의
-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권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전라북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전라북도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6 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한 간담회실시
- 27 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한 간담회실시
- 28 방과후강사 처우개선관련 개별 면담
특수고용노동자 4대보험료 관련 방송인터뷰
- 29 공공운수노조 투쟁사업장 승리결의대회 참석
- 11/2 강은미의원과 함께 전북현안사업 기자회견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공공기관유치 특별위원회 면담참여
민주노총 전북본부 선거관련 출정식 격려차 방문
- 3 통학로 미확보 학교 실태조사 현장실사
- 4 패트롤전북 교육공무직 고용과 처우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라디오 생방송 참석
-방과후학교 운영강사 처우개선 간담회
- 8 전주시위원회 가을소풍 참석
- 9 5분 발언 -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과 노동자, 농민, 장애인에 대한 적극 소통 촉구
건의안 :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 10~13 행정사무감사 : 굶직한 것만 서너가지로 1번은 방송에 노출이 다수.
1. 부교육감 농림축산식품국 국비사업으로 실습장 지원사업은 한건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남생이 13,300천원구입하고 김제마이스터고 묘포장실습장에 연못조성 농업계고 학습 효과 의문지적
 2. 돌봄전담사 관련
전북이 전국의 상시근로자 현황에서 37%로 전국의 상시근로자 최하위 돌봄전담사 노동시간도 최하위 지적과 개선점 요구
 3.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사업추진계획 질의
 4.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시 운동부지도자 고용불안지적

<p>5. 관사 및 원거리 근무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적</p> <p>11 전태일 3법 기자회견 참석</p> <p>14 노동자대회 민주당사 참석</p> <p>15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문화 힐링캠프</p> <p>19 영광원전한빛특별위원회 영광기자회견 참석</p> <p>21 전주MBC시사토론 출연</p> <p>24 부교육감 본의원의 전직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됨</p> <p>26 터놓고이야기합시다 인터뷰</p> <p>12/1 독립국악원관련 민원 청취, 경천마을 도로관련 민원청취</p> <p>2 하은의집관련 탈시설 예산확보하라 투쟁결의대회 참석</p> <p>4 부교육감 사과발언 위해 교육위원회와 의장 간담</p> <p>5 지역 봉사활동</p> <p>7 광역이동센터 운영회의 참석, cbs인터뷰</p> <p>10 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참석, 도청 공무원직 관련 총무관 면담</p> <p>11 장애인 탈시설관련 기자회견참석, 공공앱 관련 간담회 참석</p> <p>14 아름다운공동체상 회의참석,</p> <p>22 아름다운공동체상 심사참석</p> <p>23 무주하은의집 탈시설 요구 농성대회 참석</p> <p>1/2 지역 봉사활동</p> <p>6 교육청 특수교육장학관 면담</p> <p>8 교육청 공무원노조 면담</p> <p>12 행정자치국장 공무원직간제 투쟁 관련하여 면담</p> <p>15 가정어린이집 임원진 면담</p>
<p style="text-align: center;">허옥희의원</p>
<p>4/29 도청 민주노총 집회</p> <p>5/07 도청 민주노총 집회</p> <p>5/15 "80년대 여성노동자의 삶" 무형문화연구원 4차 인터뷰</p> <p>5/26 KBS패트룰 전복 -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 관련 기자회견 (2019. 7월 5분 발언)</p> <p>5/27 민주연합 일반노조 정책 간담회 (민주노총 소회의실-청소대행 정산 관련)</p> <p>6/02 전주시 마음치유 협약식</p> <p>6/03 고형 폐기물(SRF) 산단 민관 협의회</p> <p>6/09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의</p> <p>코로나위기 성평등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심사</p> <p>6/1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해고자 관련 부시장 국장 면담</p> <p>6/12 도당 2022위원회 1차 회의</p> <p>6/15 전주 비정규노동 집행위원회</p> <p>6/16~6/22 회기(372 정례회)</p> <p>6/18 김태선당원 출판기념회</p> <p>민주연합 일반 노조위원장 간담회</p> <p>6/22 5분 자유발언 ‘(ㄹ)도우 부당 징계해고 전주시가 해결하라.’</p> <p>KBS 5분 발언 관련 인터뷰</p> <p>전주 비정규노동 노동네트워크 임시이사회</p> <p>7/16~7/22 회기</p>

<p>10/22 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 공공운수 노조 투쟁승리 결의대회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포럼</p> <p>10/26 전주시 2022위원회 회의</p> <p>11/02 강은미의원 전북방문 기자회견</p> <p>11/04 현대차 노조 방문(세액공제)</p> <p>11/08 전주시위원회 송년회</p> <p>11/09 복지환경위원장 민주연합 노조 조직실장 간담회 현대차 노조 방문(세액공제)</p> <p>11/10 장혜영의원 초청강연회</p> <p>11/16 다문화 가족지원 협의회10/22 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 공공운수 노조 투쟁승리 결의대회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포럼</p> <p>12/28 김승수시장 면담 - 색장동 물놀이 사고 관련 - 재활용 선별장 해고자 발생 관련 - 청소대행업체 부당 계약 변경 환수조치 관련</p> <p>12/30 청소대행업체 부당 계약 변경과 자료 (공문서 편집) 제출 관련 기자회견</p> <p>12/31 전주시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장 면담</p> <p>1/5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운영위원회 참석</p> <p>1/6 민주연합노조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해고 관련 중재</p> <p>1/7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결의대회 참석 (해고자 12명 전원 복직)</p> <p>1/7~11 시청 청소지원과 간담회 (청소대행 현안문제)</p> <p>1/14~18일 377차 회기</p> <p>1/14 - 민주연합노조 중앙 조직실장, ** 간담회 -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회</p> <p>1/18 5분발언 예정 (전주시 대부업체 전수조사 실시 촉구)</p>	
서윤근의원	
<p>4/24 전주시의회 5분발언 -일자리 지키기가 코로나 대응의 핵심 *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 제언을 위한 정책준비 활동</p> <p>5/12 전주재난지원금 관련 kbs라디오 인터뷰</p> <p>5/14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제도도입 제언 시정질문</p> <p>5/19 해고없는 도시 관련 kbs패트럴 출연</p> <p>6/22 전주시의회 본회의. ‘건설업체 수익보장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다’ 내용으로 5분발언.</p> <p>6/22 전주시의회 상태교통연구회 간담회. - 전주시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토론회 준비</p> <p>6/22 5분발언 - 건설사 이윤보다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p> <p>7월 하순, 전주녹색기본소득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 중</p> <p>7/09 cbs 사람과사람 인터뷰 - 동 주제</p> <p>7/10 JTV 인터뷰 - 동 주제</p> <p>7/14 KBS 패트럴전북 ‘전주시 현안 개발사업’ 생방송 대담 출현</p>	

7/16~7/22 회기
 9/15 차별금지조례 상임위 부결 관련 인터뷰 진행
 10/14~19, 임시회 진행
 23 전주mbc 토론회 출연 (부동산 주제)
 11/11 시내버스개혁 중간보고 간담회 참석
 11/12 아중천 생태하천복원 민원인+집행부 간담회 주최
 11/13 주택재개발 관련 전주mbc 인터뷰

유재동의원

3/11 ~ 18 : 익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3/20 남중동 지역(북부시장) 소독
 익산시 청소년육구조사 용역결과 최종 발표
 24 한살림전북 익산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회
 26 한살림전북 익산매장운영위원회
 27 유라시아철도 용역 결과 보고회
 30~31 익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31 전북도당 “전북4.15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4/1 익산을지역 국회의원 후보와 외식업조합 익산지부 방문
 7 한살림전북 익산매장운영위원회
 8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
 9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딸기잼 만들기
 20 익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22 익산청소년자립학교장 방문
 * 익산시를 지역 국회의원선거 운동 캠프 참여
 ※ 회기 7/15~7/31
 10/19~30 익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의 활동
 10 20 2020년 시민환경학교 참석
 23 익산 다함께 돌봄 4호점 개소식 참석
 25 전북도당 당원교육 참석
 29 익산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익산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익산시민경찰봉사협의회 발대식 참석
 익산시민 정책아카데미 참석
 30 익산역 소리골아카데미 콘서트 참석
 11/2 전북도당 초청 기자회견 및 강은미 국회의원과 간담회 참석
 4 이산지역 청소년지도자교육 참석
 5 익산지역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 발표회 참석
 익산지역 장수어르신 축하잔치 참석
 익산시민 정책아카데미 참석
 6 익산 북부시장 부녀회 김장김치 봉사 함께 함.
 10 2020년 시민환경학교 참석
 전북도당 익산지역위원회 사업기획단 회의 참석
 11 남중동 발전위원회 참석
 12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정지숙의원
7/16 차별금지법 발의 → 통과 ※ 회기 7/14~7/16

김수연의원	
분 야	2020년도 주요한 의정활동 내용
청소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조례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일시: 2020.3.18.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정 ○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관단체 협의회 의결 수렴 • 청소년 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회 • 익산시의회, 시행정, 교육청, 청소년시설 지도사, 청소년 대표, 지역 인사로 구성 / 청소년정책 전반 논의 구조 ○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1차 용역)>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3월 ○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차 용역)>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 익산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내용 결정, 향후 지역에서 논의하여 사업 진행할 근거 마련 ○ 청소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결과 및 성과 (의정활동 5년의 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용역 결과 제출 • 익산시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첫 시작 • 청소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정의당 시의원이 5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 익산시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 형성 / 청소년 지도사들의 신뢰 형성 구축 / 향후 계획 수립이 성과로 남음 •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협의회 감사장 수상 ○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위한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익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준비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진행 / 추경예산 편성 • 청소년시설의 지도사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주체발굴을 위

	<p>한 사업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익산시의회에 청소년의회 전담 직원 배치 • 세종시, 광주시 등 선진지역 견학 및 대안 마련
익산시 아동친화 도시 정책	<p>○ 익산시 아동학대 실태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방문하여 실태 파악 • 아보전 관장 및 법인 굿네이버스 대표와의 간담회 (수차례 진행) • <학대아동쉼터> 방문하여 실태 파악, 시설장 간담회 • 타 지역 아보전 및 쉼터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 • 학대 아동 장기 시설 <이리보육원> 방문하여 실태 파악 • 익산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의 간담회 <p>○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학대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며 • 일시: 2020.12.18. 5분발언 <p>○ 아동학대 관련 질의 및 5분 발언의 결과 및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전담공무원 배치 증가 • 7명의 전담공무원으로 아동학대 TF팀 빠르게 구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일시쉼터 현장 사람들의 신뢰 형성 / 당사 자분들이 직접 5분 발언 영상 공유로 대안마련의 분위기 형성 <p>○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아동학대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역 토론회 / 각 계 각종 간담회 / 교육 및 홍보 예산 편성 / 조례 개정 <p>○ <익산시 마을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12.20
익산시 노동 분야 정책	<p>○ 제226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6.18. • 주제: 버스노선의 문제점 및 대중교통의 대안마련을 위해 •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운전자분들과의 간담회 진행 (3개 회사 노동조합과 간담회 수차례 진행) -직접 시내, 시외버스 동승하여 현장 노선 문제점 파악 -식사 시간 문제 및 화장실 관리 여부 파악 -용역 과정 및 결과의 부실함 파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속과 신호위반 조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대책 질의 -버스운전자들의 최소한의 요구, 화장실 설치 유지 위한 대안 마련

	<p>-가장 중요한 주체인 현장 운전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역과정부터 담겨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및 대안마련에 대한 질의</p> <p>○ 시내버스 문제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진행 - 향후 대책 마련 • 논의 구조에 민주노총 포함 및 대안마련 위한 시 조례 개정 <p>○ 익산시 청소 위탁업체 관련 지속적인 질의 및 대안 요구</p>
정의당 익산시위원회 사업	<p>○ 정의당 차별금지법 선전전</p> <p>○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선전전</p> <p>○ 위원회 회의 및 기타 현장 활동</p>
정의당 전국위원회 활동	<p>○ 정의당 전국위 회의 참여</p>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활동	<p>○ 원칙이 있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한 활동</p> <p>○ 익산시의회 연구모임 <재정정책연구회> 구성 및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용역 최종보고회 • 의회 자체 용역 결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 <p>○ 익산시의회 연구모임 <도시혁신연구회> 구성</p> <p>○ 각종 연수 계획 및 정확한 의무교육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연수 (의무교육 포함) - 운영위원회 연수 진행 : 의회 운영위원 역할 및 선진 사례 공부를 통한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
기타 조례 개정	<p>○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p> <p>○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p>
지역구 활동	<p>○ 가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간담회를 통한 학교 주변 안전 환경 만들기 • 운영위원회 개최 • 학부모들과의 학부모 교육 계획,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진행 <p>○ 지역구 내에 있는 학교 주변 안전 문제 해결 중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 환경 조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 정책 실현) / 환경 디자인 개선 및 CCTV, 속도 카메라 등 <p>○ 그 외 다양한 민원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견 센터/학교앞 셉테드정책/익산시 시내버스 노선문제/교통 신호등 해결/어린이집 앞 안전시설/농수로 오페수 문제/경로당 복지문제/오산면 지반 붕괴 민원, 도로 보수, 교통시설 문제, 아동학대 민원, 악취문제 등...

<p>그 외 주요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여성안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화장실부터 불법카메라 점검 정기적 실시 요구 •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담당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 관련 적극 홍보로 다수의 시민이 활용 가능하도록 촉구 정책 외 ○ 익산시 장애인 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가능하도록 대안 촉구 / 향후 장애인 가족분들과 보건복지위 간담회 요구 • 저상버스 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 촉구 • 장애인인권위원회를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수렴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 촉구 ○ 익산시 노인 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책이 산발적이고 예산낭비가 심한 부서이므로, 익산시 노인 현황 파악 및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 필요성 제기 ○ 익산시 환경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푸른공원과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안 논의 (전주 등 타지역 모범 사례 연구 및 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한 대안 구상) •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등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지도점검 강화 및 지역시민단체의 의견 청취 기구 실질적 운영). 향후 환경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축적, 처벌강화, 중소기업이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 •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 행정 요구 ○ 비정규직, 공무원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단시간, 종일제 공무원 근무형태의 자유로운 변환 요구, 현장 선생님 인사 이동 시 당일 공지, 다음 날 배치 등 아동들과의 라포형성을 파괴하는 행정편의주의식 사업에 대한 폐단 지적 • 익산시행정에 만연한 노동 경시 행정 풍토에 대한 부서별 지적 외
------------------	--

③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정의당 전북도당 제2차 총선거 대책본부 회의 (제5기 8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02월 11일(화) 19:00
-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 참 석 : 염경석, 김성연, 안윤정, 최영심, 김수연, 정지숙, 박순천, 권태홍,
한승우, 유석기, 정광수, 심지선, 고양곤, 서윤근, 허옥희, 유재동,
이찬영
-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2020년 대의원대회 준비안건 논의의 건

1. 1. 2019년도 하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안) 논의 건

1) 2019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안)

대부분 그간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분량관계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잘 준비하여 대의원대회에 하반기 사업보고 하기로 함.

2) 2019년 하반기 사업평가(초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논의안건2. 2019년도 하반기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심의 건

1) 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2) 2019년도 하반기 감사보고서

원안대로 접수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로 함.

논의안건3. 2020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1) 2020년 사업계획(안)

- 29P 첫줄 (민주당 아류당 퇴출선거) 삭제
- 편집 잘못으로 사업보고에 편집된 예술위원회 사업계획은 8.부문위원회 사업에 추가
- 그 외 원안대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2) 2020년 예산(안)

- 【기본경비】【공공요금】【신문도서비】신문구독료의 매일노동뉴스 예산 삭제
- 【정치활동비】【선거비】【선거지원금】 일부 항목의 구분이 잘못되었고 금액이 달라 정확한 구분과 금액을 다시 확인 수정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 그 외 원안대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논의안건2. 02월 사업계획 심의 의결 건

<원안통과>

기타 토의안건1.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건

<원안통과>

기타토의안건2.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설치 건

<원안통과>

청소년위원회(주) 준비위원장 이찬영

차기회의일정 : 전북도당 제3차 선거대책본부 회의 (제5기 9차 운영위 회의)

2020년 3월 17(화)일로 정함. 끝.

정의당 전북도당 제1차 총선거 대책본부 회의 (제5기 7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01월 21일(화) 19:00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참 석 : 염경석, 김성연, 최영심, 정지숙, 정상모, 권태홍, 한승우, 유석기,
정광수, 고양곤, 오형수, 서윤근
☒ 참 관 : 이찬영, 강월성, 강대형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선거대책본부 구성 건

1. 원안통과

- 선거대책본부장 염경석 외 원안 의결
- 운영위원 중 총선후보는 전북선거대책본부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후보선대본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대체하여 성원으로 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는 조직팀장, 정책팀장, 온라인실천단장, 선대위 조직팀장과 그 외 필요한 성원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논의안건2. 총선후보 정치후원금 배분 건

1.원안 통과

- 2019년 전북도당 정치후원금(10,504,409원)을 지역 총선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에 본 선거 등록 즉시 균등배분 지급하고 이후 선거비용보전에 따라 상환 하지 않는다.

논의안건3. 01월 사업계획 심의 의결 건

-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2020년 3월 10일 19시
- 전북도당 이전 개소식 2020년 2월 18일 16시
- 전북도당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2020년 2월 18일 19시
- 그 외 원안 통과

기타토의. 없음.

1. 차기회의일정 : 전북도당 제2차 선거대책본부 회의 (제5기 7차 운영위 회의)
2020년 2월 11(화)일로 정함. 끝.

정의당 전북도당 제3차 총선거 대책본부 회의 (제5기 9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03월 17일(화) 19:00
-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 참 석 : 염경석, 안윤정, 최영심, 김수연, 한상구, 정지숙, 한승우, 정광수,
심지선, 오형수, 이찬영, 서윤근, 허옥희, 유재동
-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3월 사업계획 심의 건

1. 4P 정의당 전북 소통방 운영 기준 변경
총선기간에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한다.
변경내용: 07:00~22:00(저녁10시 이후 글쓰기 금지)
2. 15p 정의당 전북도당 공약 중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둑 개방을’ →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 복원을’
로 변경
3. 26p 정의당 전북도당 공약 중
3. 전주에서 대중교통의 수소전기차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전북을 그린뉴딜의 랜
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 3. 전주에서 대중교통의 수소전기차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전북을 그린뉴딜
의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로 변경
4. 28p 정의당 전북도당 공약 중
5. 전주를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전주, 전북을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로 변경
하고 이후 내용의 ‘전주’를 ‘전주, 전북’으로 변경
13줄 <오타 수정> 수아통역 → 수어통역, 수아교육 → 수어교육
6. 31p 정의당 공통공약 중
3.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 논·밭직불금 인상, 여성농민 지위보장 법안을 만들
겠습니다.
→ 3. 월 2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논·밭직불금 인상, 여성농민 지위보장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로 변경하고 이후 내용의 농민을 농어민으로 변경

<그 외 원안 통과>

차기회의일정 : 전북도당 제4차 선거대책본부 회의 (제5기 10차 운영위 회의)
2020년 4월 28(화)일로 정함. 끝.

정의당 전북도당 제4차 총선거 대책본부 회의 (제5기 10차 운영위 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04월 28일(화) 19:00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참 석 : 염경석, 김성연, 안운정, 김수연, 한상구, 정상모, 권태홍, 한승우,
유석기, 정광수, 심지선, 이찬영, 유재동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415 총선 결과 보고 및 평가(안)

- 제출된 총선결과 보고와 객관적 평가(안)을 기초로 운영위원들이 다음의 평가 의견을 내다.
- 중앙당의 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따로 하지 않고 운영위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도당의 415 총선평가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한다.
- 붙임 : 21대 총선평가 토론 의견

논의안건2. 5월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건

<원안 통과>

차기회의일정 : 전북도당 제11차 운영위 회의
2020년 5월 19(화)일로 정함. 끝.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의 21대 총선평가 토론 의견

☒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19시

☒ 장소: 전북도당

- 후보가 있는 지역도 물론 어렵게 선거를 치렀겠지만 후보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이 부족했다. 정당득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당에서 제시하지 않아 선거기간 동안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후 어떤 가능성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구 후보들이 득표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비례대표 득표는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많이 아쉽다.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하여 표를 가져가기도 했지만 이 또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선거를 했어야 한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정의당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 주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쇄신이 필요하다.

- 전북에서 후보가 출마한 시 지역보다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의 군 단위 정당 득표율이 상승하였는데 2022년을 대비한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역에서 2018년부터 준비해서 선거를 치렀다. 선거운동 기간 당 대표가 후보들 지원유세를 했다. 광주-전남을 거쳐 전북에도 방문했다. 잠깐이나마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지나갈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선거 전에 당대표가 지역구를 오겠다 공언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후보를 지원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인가. 지원 전략에 베이스는 있어야하지 않나. 이를 사전에 제시해줬어야 한다.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지역에서 애써 나온 후보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 위성정당의 잘못된 점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공세적으로 갔어야 했는데 수세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선거는 바람도 있지만 지역구는 역시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이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서 바람도 불 수 있다고 본다. 조직화 작업이 필요하다.

- 한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당 지지층이 우리당에 투표하겠다고 한 비율이 낮더라. 비경쟁명부 비례 순번을 받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선거운동을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 선거운동 시작일 전날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 당 비례에 장애할당이 있다. 장애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고 했는데 시도 부에서 외부인사 영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부문위원회와 시도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사 영입에 있어서 부문위와 상의할 의무가 없다고 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당에 부문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당 활동을 하면서 특히 장애인위원회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당 내부부터 쇄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집 될 수 없다고 본다.

- 노동현장에서는 다른 당 찍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비례경선에서도 보여지듯 중앙은 메이저리그, 지역은 마이너리그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정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지역구 출마자들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말이 나온다. 획기적인 쇄신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다.

- 이번 정의당 전략 중 하나가 청년 타겟팅이었다. 주위 활동가들에게는 먹혔던 것 같다. 다만 대중적인 청년들에게 전략이 먹혔나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한테조차 지지받지 못했다. 스스로도 주위 청년들에게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웠다. 정의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줄 수 없었다.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별개로 청학위 단위가 결합해서 힘을 쏟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조직된 청학위를 만들어 보이겠다.

- 18세 선거권이 첫 도입된 선거였다. 주위에서 지지한다,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도당이나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내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의 부재,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관련 정책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

- 선거때마다 늘 바람과, 꿈수정치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후보를 내고 그 과정에서 한 명 한 명 나타나는 사람들을 챙겨서 다음을 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을 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당을 봐서 감동적일 때 움직이더라. 사람을 엮어내는 것은 차차 해나가야할 과제다. 정의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쪽 진보의 가치를 지켜왔던 사람들에 더해 노회찬 의원께서 서거하시고 난 이후 외연이 더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진보의 색채도 벌어지기도 했다. 당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진보적 의제를 찾아내고 선점해야 한다. 기층 조직 문화가 없어진 것에 대한 위기도 많이 느낀다.

- 의제를 갖고 지역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정의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촘촘하게 조직책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그런 조직을 만들어 관리해온 것 아닌가.

- 중앙당에 물어봤다. 선거운동 시작 전에 당 대표 동선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취약 지구를 포기하는것인지 응원하는 것인지, 부대표 등 중앙당직을 갖고 있는 후보 위주로 대표가 움직였다고 답했다. 이런 조건이라면 신규 출마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선거가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다. 패싱되는 후보가 됐다. 전략과 전술이 부재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다. 선거전략본부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내 담당이라고 중앙당직자가 전화 한통 받았을 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또 당대표, 부대표, 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출마했다. 선거총괄, 누가 진두지휘했나?

- 청년후보의 조국 관련 발언이 있었을 때 선대본과 무관하게 청년들이 자발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선대본이 후보 통제가 안됐다는 것 아닌가?

- 중앙과 지역사이에서 도당이 소통창구 역할을 잘 했어야 한다. 그게 잘 안되었고 패배적이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안타깝다. 지역에서 활동을 나름 잘해나간 것과 함께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도당 역할을 높여내야 한다.

-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도 인정해야 한다. 지역방문 계획이 많이 변동되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앙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

- 당시 심상정 대표 지역구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조율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 오늘 이야기 나왔던 평가의견을 중앙에 서면으로 제출하자. 지역후보지원 문제, 내부적 문제, 선거운동 방향이 없었다. 중앙당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하자.

정의당 전북도당 제5기 11차 운영위 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05월 20일(화) 19:00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참 석 : 염경석, 정광수, 허옥희, 유재동, 유석기, 정지숙, 한승우, 정상모,
한상구, 이찬영, 안윤정, 최영심, 김성연, 김수연, 서윤근, 김민아

☒ 배 석 : 송민정, 안봉순, 박선희

<보고사항>

1-10. 서면·구두보고 공유

11. 제5기 10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공유>

- 당비배분안의 전국위 결정에 대하여 지역당부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한다. 승인한 이후에 소통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 당대표의 취임 당시 공약이 지역위 강화였다. 당비배분은 재정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전략문제이기도 하다.
- 혁신안을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기존의 조직을 두고 혁신위라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
- 사퇴하겠다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 혁신위가 아닌,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서 당을 정상화해야한다.
- 책임지고 당대표와 상무집행위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 지금 상황은 대표가 멋있게 퇴진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 혁신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 현재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자력으로 활동하고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기존 정당들이 늘상 가장 무책임하게 했던 것이 지도부 사퇴하고 비대위를 띄우는 것이었다.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대책을 만들어 놓고 사퇴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 전국위에서 혁신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위원 추천을 하면 좋겠다.
- 당 전반적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다. 재정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처절한 현실 등이 혁신위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선 정상모 위원장을 추천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혁신위원을 추천하자.

-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전달하도록 하자.

<논의결과>

논의안건1. 사무처장 인준

<원안 통과>

논의안건2. 6월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건

- 원안 내용 중 인권교육 일정을 당초 6월 13일에서 6월 27일로 변경하여 통과

논의안건3. 전북도당 2022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에 안윤정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함

차기회의일정 : 전북도당 제12차 운영위 회의

2020년 6월 16일(화) 19시로 정함. 끝.

정의당 전북도당 5기 제12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19:00

☒ 장 소 : 전북도당 사무실

☒ 참 석 : 염경석, 최영심, 김수연, 한상구, 정지숙, 한승우, 유재동, 유석기, 김민아,

☒ 배 석 : 안봉순, 송민정

【보고사항】

성원부족으로 간담회로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1. 7월 사업계획(안) 심의

1. 당원 인권교육

1) 일시 : 7월 4일(토) 14:00~17:00

2) 장소 :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 프로그램

1강 성평등교육 - 강사 박인숙

2강 장애평등교육 - 강사 심지선

2. 신입당원 교육

1) 일시 : 2020년 7월 16일(금) 19:00~21:00(가안)

2) 장소 : 전북도당 당사(참석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3) 대상 : 2020년 1월- 현재까지 가입한 당원 (약 170명)

4) 프로그램 : 정의당 소개, 지역정치와 정당 강의(서윤근의원)

3. 혁신(안) 토론회

1) 일시 : 7월 21일(화) 도당운영위 후 19:00 진행

2) 장소 : 전북도당 사무실

3) 내용 : 혁신위에서 제출한 초안에 대한 토론회 진행.

지역 의견 전달.

◆ 논의안건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역사업 논의

- 이번주 중앙당에서 이에 관련된 사업논의가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3 고 노회찬 의원님 서거 2주기 추모제 참여 논의

- 버스 대절하여 참여하기로 함.

1) 일시 : 7월 18일(토) 11시

2) 장소 : 마석 모란공원 묘지

▶ 차기운영위 일정 - 7월 21일(화) 오후 6시

<정의당전북도당 5기 제13차 임시운영위 회의 결과 보고>

- ☒ 참석 : 염경석, 김성연, 안윤정, 한상구, 정지숙, 한승우, 유석기, 정광수,
심지선, 고양곤, 오형수, 허옥희, 유재동, 김민아
- ☒ 사고 : 서윤근(전자기기 고장)

논의안건 : 차별금지법 제정 사업의 건

1. 전북도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1) 위원회 구성 - 도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청년 노동 여성 등
부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함
- 2) 위원장 선출 - 염경석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함

2. 주요사업 및 일정 - 아래와 진행하기로 함

- 1)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10시 30분
 - 장소 :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 2) 홍보활동 - 각 지역위원회 진행
 - 캠페인 : 출퇴근 선전전, 현수막 게시
 - 정당연설회, 범국민서명운동 등은 추후 전국 상황 보면서 보조를 맞춰
차기 운영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3) 차별금지법제정 운동본부 발족 (8월~)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역시도당 및 가능한 지역위원회 별 운동본부 발족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진행

※ 전북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정의당 전북도당 5기 제14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17:30
- ☒ 장 소 :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 ☒ 참 석 : 염경석, 안윤정, 김수연, 한상구, 정지숙, 정상모, 한승우, 유석기,
고양곤, 오형수, 이찬영, 허옥희, 유재동, 김민아
- ☒ 배 석 : 박선희, 송민정

<논의결과>

논의안건1.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 주요사업

- 원안대로 하기로 함

기타안건.

- 2022위원회 논의
기획단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전체회의 진행하기로 함.

차기회의일정

전북도당 제15차 운영위회의 : 2020년 8월 18일(화)로 정함.

【정의당 전북도당 제5기 15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8월 18일(화) 19:00
- ☒ 장 소 : 정의당전북도당 사무실
- ☒ 참 석 : 염경석, 안윤정, 최영심, 한상구, 한승우, 유석기, 정광수,
심지선, 오형수, 이찬영, 서윤근, 유재동, 김민아
- ☒ 사 고 : 허옥희(입원)
-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송민정, 이재민

<논의결과>

논의안건1.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 원안대로 하기로 함

* 당권자 변동으로 선출정수에 변화가 있을 시 재논의하기로 함.

【정의당 전북도당 6기 제1차 운영위 회의 결과】

- ☒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19:00
- ☒ 장 소 : 정의당 전북도당
- ☒ 참 석 : 오형수, 허옥희, 한상구, 김수연, 안윤정, 이찬영, 서윤근, 한병옥,
최영심, 유재동, 김민아
- ☒ 배 석 : 안봉순, 이재민

<논의결과>

논의안건1. 부문위원장 인준 관련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2. 사무처장 인준 관련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3. 전북 활동가 기본교육 관련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4.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도당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에 총력을 다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1. 목 표 : 300명 (금액:2400만원, 배분비율 중앙당20:도당80)

* 도당 재정 적자 : -19,756,054원

2. 기 간 : 10월 22일 ~ 11월 19일까지

3. 취 지 : 당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사업 과정에서 당을 홍보하고 당원
조직사업을 도모한다.

4. 내 용 :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직 요청
전 당원 후원금 조직 및 특별당비 요청

기타 토의. 도당운영위는 매월 3번째 월요일 진행하기로 함

차기회의일정 11월 16일 (월)

【정의당 전북도당 제6기 2차 운영위 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19:00

☒ 장 소 : 정의당전북도당

☒ 참 석 : 오형수, 허옥희, 한상구, 안윤정, 이찬영, 권태홍, 서윤근, 염경석,
고양곤, 정광수, 최영심, 김민아

☒ 배 석 : 박선희,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부문 및 특위 위원장, 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2. 2차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4.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설문조사 사업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5. 신입당원 교육

- 원안대로 하기로 함

기타토의.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당내 토론회 개최

차기회의일정 12월 21일(월) 6:30 도당 운영위 및 송년회

【정의당 전북도당 제6기 3차 운영위 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10:00-12:00

☒ 장 소 : 전자회의

☒ 참 석 : 오형수, 허옥희, 최장호, 김수연, 안윤정, 이찬영, 정지숙, 권태홍,
서윤근, 한병옥, 엄경석, 심지선, 고양곤, 정광수, 최영심, 서효정,
유재동, 김민아.

☒ 배 석 : 안봉순

<논의결과>

논의안건1.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참가 요청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2. 미선출 지역위원회 재정비 활동

- 원안대로 하기로 함

논의안건3. 지역 연대 사업 확대 및 강화 사업

- 원안대로 하기로 함

기타토의.

- 차기회의일정 : 2021년 1월 18일(월)

4 부서별 사업보고

1) 언론사업

일 시	내 용
1월 6일	[보도자료]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지도부, 호남권시도당위원장 5.18 묘역참배 및 현장상무위원회 개최
1월 7일	[논평] 수자원공사는 권역별 통합 물관리 기구를 존치시켜라
1월 22일	[보도자료] 정의당 전라북도당, 설 맞아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2월 3일	[보도자료] 정의당·전북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월 4일	[논평] 그 놈의 KT왕국에는 국민이 없다
2월 7일	[논평] 언제까지 노동자의 삶이 자본의 소모품이어야 하는가
2월 12일	[기자회견문]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정책 발표 기자회견
2월 17일	[논평] 정운천의 미래한국당 입당, 그의 미래는 끝났다
2월 26일	[기자회견문] 정읍시의원 성추행 검찰 고소사건 관련 정읍시의회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기자회견문
2월 28일	[기자회견문] 전주시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수준이 한심하다
3월 6일	[성명]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 노동자 영세상인의 생계 대책 마련하라 [논평] 더불어민주당 전북 후보자들의 면면이 지역독점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3월 13일	[논평] 이판사판은 막장에 있다
3월 23일	[기자회견문] 정의당전라북도당 제21대 총선 주요공약발표
3월 24일	[논평] 정읍시의회는 2차가해를 멈추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에 나서라
3월 26일	[기자회견문] 더민주당·청와대는 코로나 긴급예산 191조 편성 응답해야
3월 30일	[논평] 총선후보자들이 방송토론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이다
3월 31일	[기자회견문] 정의당전라북도당 4.15총선 판같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4월 3일	[보도자료]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전북 방문해 지역구 후보자 유세지원 및 코로나19 위기 살피며 민생행보 이어가
4월 6일	[논평]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예산·교육보조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4월 7일	[기자회견문]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4월 8일	[기자회견문] 익산 왕궁에 코스트코 입주를 반대한다
4월 9일	[성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살리는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확대 시행하라
4월 10일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불량식품을 반품해야 한다
4월 14일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의 촛불 사회개혁을 견인할 힘은 정의당에서 나옵니다
4월 16일	[보도자료] 총선 인사
4월 26일	[논평]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방향과 속도가 달랐다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본심을 밝혀라
4월 27일	[기자회견문]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의혹과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4월 29일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자정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5월 8일	[논평]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5월 15일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촉구한다.
5월 16일	[논평]오리온은 ‘익산공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6월 10일	[논평]우수의정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6월 29일	[보도자료] 현실적인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7월 2일	[논평] 이상직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전북도민에게 사죄하라
7월 9일	[기자회견문]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7월 17일	[성명]정의당전라북도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7월 22일	[성명]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지고 청소업 무대행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선동 나인권의원은 사죄하라!
8월 7일	[성명]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 전북은 장애인 인권침해 왕국인가!
8월 26일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운영하라!

8월 27일	[성명]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와 교섭을 시행하라
9월 2일	[성명] 무기한 파업 강행하는 전북대·원광대병원 전공의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라!
9월 3일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9월 4일	[논평] 의료공공성 배제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밀실야합 규탄한다!
9월 9일	[논평]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명의 전주시의원에게 지지를 보낸다.
9월 11일	[기자회견문]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보도자료]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
9월 15일	[논평]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는 이스타항공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편법 승계,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성명]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결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9월 24일	[논평] 이상직 의원은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9월 26일	[보도자료] 제6기 정의당전라북도당 오형수위원장 당선
9월 28일	[보도자료] 제6기 정의당전라북도당위원장 오형수 당선인 인사
10월 22일	[논평]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공공의사 인력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10월 26일	[논평] 한빛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대한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균열 가능성을 포함한 정밀 조사 실시하라.
11월 2일	[기자회견문]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과 도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불통과 무능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보도자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행보에 나서
11월 13일	[보도자료]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전북대 초청 강연 열려
11월 19일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요구한다!
11월 26일	[논평] 최영심 전라북도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한 정병익 부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라
12월 10일	[보도자료]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관한 전북도 내 자영업자의 인식 설문조사결과 발표
12월 31일	[보도자료] 오형수 정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신년사

[보도자료] 1월 6일 배포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지도부, 호남권 시도당위원장
5.18 묘역참배 및 현장상무위원회 개최**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호남권 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출마자 당원 등 100여명이 5.18묘역참배, 5월단체와 좌담회, 현장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당대표는 “그동안 광주, 호남시민들은 민주당을 견제하고 대체할 대안 견제세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고심해 오셨습니다. 5.18 광주정신은 정의당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호남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라며 광주시민, 호남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염경석 전라북도당위원장은 “호남은 지방자치 이후 30년을 민주당이 독점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지역에서 민주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느냐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며 “정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남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정의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1월 7일 배포

수자원공사는 권역별 통합물관리 기구를 존치시켜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 1월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금·영·섬권역부문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관부처가 바뀐 후 유역별 관리를 이유로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분할 설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국가의 물관리가 소관부처에 따라 다르다는 것까지 국민들이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피곤한 사회라는 것을 절감한다.

많은 전북도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힘과 경제논리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통합관리 기구인 금·영·섬권역부문을 해체하고 충청과 전남에 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동하여 治水를 망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또한 홍수통제, 배수, 유사통제, 오염방지 등과 산업시설과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수력발전 및 위락, 관개, 수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물관리가 국가경쟁력인데 경제논리만으로 비용을 줄여 충·호남권의 통합 물 관리능력을 해체하는 것은 소탐대실 아닐 수 없을 텐데 이쯤 되면 국가가 국민들에겐 5급수가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삽질만 하고 삽질이 끝났으니 환경부가 유역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100년의 계획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고, 수자원공사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청정한 물이 산하에 끊임없이 흐르도록 필요인력과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권역별 물 관리 정책을 지지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살아 숨 쉬는 강과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1월 22일 배포

정의당 전라북도당, 설 맞아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정의당전라북도당 염경석 위원장과 오형수 정책위원장, 최영심 전북도의원 및 당원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전주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이들은 오늘(1월 22일) 오후 4시부터 전주 남부시장 일대를 돌며 상인들에게 설 인사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상점가 지원 확대 법안(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등록 요건에 가로막혀 정부·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상점가들을 등록 및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정의당의 민생행보는 경기도 안양에서 심상정 당대표와 추혜선 국회의원 등이, 군산 공설시장에서 정지숙 군산시의원 및 당원들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1월 2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2월 3일 배포

**정의당·전북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정의당과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 새만금 도민회의는 2월 3일 국회에서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당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새만금 담수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며 “정부가 해수유통을 전제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 전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가칭)하구역 복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 하구역 복원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맺는 정책협약은 그 시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약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의당은 새만금의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사업의 전환을 21대 총선공약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가칭)하구역복원특별법’을 우선발의 법률로 채택하고 이의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의당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권태홍 사무총장, 염경석 전라북도당위원장, 한승우 전주지역위원장, 이봉원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20년 2월 3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2월 4일 배포

그 놈의 KT왕국에는 국민이 없다.

한옥콜이 9년간 콜센터의 대표번호(063-221-1111)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그 대표번호를 KT가 일방적으로 회수하려고 한다. 이는 단지 전화번호 하나를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다. 오랫동안 한옥콜이 쌓아 온 대표번호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택시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한옥콜이 아니면 063-221-1111이라는 전화번호가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로서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질 수 없었다.

임차인이 9년 동안 열심히 시설 투자를 하며 장사해서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난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KT가 회수한 한옥콜의 대표전화 번호를 택시 콜센터를 운영하는 파트너사에 넘겨 하루에 8,000건에 이르는 택시 콜 영업망을 한옥콜이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금을 빼앗아 파트너사에 팔아 챙기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 하의 최대 갑질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KT 참으로 질기다.

민주노조 탄압으로 악질기업의 오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또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채용비리와 고액 자문료와 로비 의혹, 웹툰 작가들의 웹툰 플랫폼 '케이툰'에 일방적 연재중단 갑질 등으로 국민들은 지쳐있다. 그런데 이번엔 한옥콜 권리 강탈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KT는 민간기업이지만 전신이 국가기간통신망을 담당하던 공기업 한국통신이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좋은 점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뽑아다 만든 공룡이라는 세간의 얘기가 다시 한 번 떠올려진다.

2020년 2월 4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2월 7일 배포

언제까지 노동자의 삶이 자본의 소모품이어야 하는가?

지난 2월 4일 한 노동자가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인에게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이 된 노동자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가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의 하청업체 SNP중공업이 또다시 하청을 성진기업에 주었고 이에 재하청기업인 정현ENG와 성하기업의 김제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간 일 했던 임금이 체불되었고 같이 일하던 20여명의 노동자들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최근까지 노력해왔다.

고인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었을 삶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만 투신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심정을 헤아려보면서 막막했을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다단계 하청구조와 체불임금 참 지겹게 들어봤던 자본의 주특기에 또 노동자가 당했다는 것에 분노가 차오른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체불임금과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원·하청 공동책임,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이 직접지급 등 수많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이 발의하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외주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돈을 아낀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그 돈이 지급됐는지, 하청노동자의 처우가 어떤지 관심가질 필요가 없는 지금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유지하려는 거대 자본의 반대로 지금도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고인의 힘들었을 삶의 무게를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 고인의 평안을 위하여 회사의 책임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2월 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정책 발표 기자회견

2020년 4월은 우리나라의 살림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선발하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달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으나, 집권 4년차인 지금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의 온도에서 맴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한 정당의 이름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 인상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국회 앞에 버젓이 내걸리고 각종 이익과 이념과 자존심 싸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권 출범시 약속했던 장애계 관련 공약이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원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2020 총선 대비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다.

- 하나. 모두를 위한 편의를 갖춘 유니버설 디자인 여행도시 인프라 구축
- 하나. 장애인 전담 재활병원 설립
- 하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전국 일원화와 시내·외 교통수단 확대
- 하나. 전라북도 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추가시간 확대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적정임금 및 처우보장 강화
-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AAC마을 형성
- 하나. 고령(65세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을 수립
- 하나. 장애인의 고정(정규직)취업의 확대로 안정적인 삶 보장.
- 하나. 베리어프리 시설 정보 어플 제작 보급.
- 하나. 공영방송에 화면해설사와 수어통역사 배치
- 하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설치
- 하나. 장애인 공기업 설립 추진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하고, 한국에서도 비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과 함께 정의당 전라북도당과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발표한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2월 17일 배포

정운천의 미래한국당 입당, 그의 미래는 끝났다

2020년 1월14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쉽지만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이 되었으며, 이 개정안을 논의했던 '4+1 협의체'에는 당시 정운천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바른미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운천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부정하면서 만든 하청계열사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하였다.

지난 1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더니 미래한국당으로 재입당했다.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을'을 버리고 비례로 출마해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의 노욕이 부른 참사는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 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 '전주시을'의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새 보수인가? 보수의 재건과 전북발전을 위해서라고 정운천 의원은 말한다. 박근혜 탄핵 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헤쳐모여 하는 것이 보수의 재건이라면 그렇게 하시라. 다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접으시라.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 차고 넘친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의원 성추행 검찰 고소사건 관련
정읍시의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기자회견문**

얼마 전 정읍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정읍시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방 의회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보다 비난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작년 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 온 이후 정읍시민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유럽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를 출입했다느니, 호텔에서 금지된 흡연을 하다가 벌금을 냈다느니, 연수에 동행한 정읍시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느니, 유럽현지의 공공장소에서 의원들 간에 고성이나 오가는 싸움으로 진상을 부렸다는 등등. 이 사건으로 서울의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취재차 정읍에 내려왔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기사화 하지 못했다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정읍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읍시의회는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숙하고 또 자숙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읍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의원이 동료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많은 정읍시민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하십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원이나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중희 의원은 시민들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2.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3. 진상조사 결과 성추행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을 즉각 제

명하십시오. 또한 김종희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피해자와 정읍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성추행범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4. 정읍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선해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하십시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이번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 김종희 의원과 정읍시의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11만 정읍시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성추행 고소사건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덮고 가려고 한다면 정읍시민들의 거센 비난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전주시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수준이 한심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이 장기간 공백상태인 채 이 위기를 버티고 있다. 전주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월 16일 퇴직한 보건소장의 퇴직사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과중한 업무에 더해 의사의 평균 소득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왔음은 확인할 수 있다. 처우 개선과 업무의 경감 방안을 찾아 개선하여 보건소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이어 반복되는 보건소장 구인은 전주시 인사행정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문제 지적이 있었을 때 보건소장이 주민 감염병 예방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승수 시장이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음식점을 돌며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대비하고 추가 감염 확진자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전주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최고의 퍼포먼스일 것이다.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각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승수 시장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3월 6일 배포

더불어민주당 전북 후보자들의 면면이 지역독점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본선에 진출한 이강래 후보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해 1,500여명의 대량해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외침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리를 아낌없이 버리고 국회의원 후보경선에 나선 것이다. 무엇으로 형제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전 국민연금이사장 김성주 전주병 후보도 적폐후보이다. 국민연금이사장 시절 선거구에 위치한 경로당에 상품권을 주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후보를 단수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이 한심하다.

또 하나의 공기업 대표였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이상직 후보도 그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집어치우고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 본선에 올랐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을 총선 출마 예정 지역구의 지방의원들과 선출직 공무원에게 발송한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익산을 한병도 후보를 결정한 것은 민주당의 30년 지역독점의 폐해로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그 오만함이 경쟁자가 없어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막대기들이 아니라 우리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적은 수의 후보를 내지만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들로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성명] 3월 6일 배포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 노동자 영세상인의 생계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을 위해 개학 시기에 맞춰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생산해 오던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되고 또 언제 개학할지 모르는데 학교 급식재료로 상품화되어 학생들의 먹거리로 쓰여야 할 각종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이러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또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책임져왔던 농가 등에 긴급지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생산 시기에 맞춰 생산하였으나 저장성이 길지 않은 시금치, 얼갈이, 아욱, 근대, 대파, 오이 등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코로나19로 장보기가 줄어드는 시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긴급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위한 운동 등 생산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한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고 휴직상태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개학 연기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직접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 정의당 전라북도당도 학교급식 생산 농민단체들이 당원과 시민들의 직거래를 통한 식재료의 소비를 위한 홍보를 이미 전개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교급식의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학교 개학 연기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학교 공무직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3월 13일 배포

이판사판(理判事判)은 막장에 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개정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꿈수에 대응하겠다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해버리고 다시 기득권 나눠 먹기 양당 카르텔을 복원하려는 막장 정치다.

우리 정의당에 전화를 하여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문재인정부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공포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전북 민주당은 30년 지역독점, 기득권정당이며 변화가 없는 당이다. 전북이 경상도지역이었으면 친박당이나 하고 있을법한 후보들이 득실거리는 민주당세력과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의 특별결의문을 통하여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 결정을 하였다는 소식에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변화를 거부하고 신선한 바람조차 없는 민주당에 맞서 30년 지역독점 폐해를 갈아엎을 판같이 후보들과 함께 골목까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논평] 3월 24일 배포

정읍시의회는 2차가해를 멈추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에 나서라!

지난 2월, 정읍시의회 의원간 성추행 고소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정읍시위원회는 피고소인에게는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정읍시의회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성추행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고소건이 있는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정읍시의회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정읍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또 정읍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현재는 자당 소속을 떠났고 논란이 발생했던 시점에는 타당 소속이었다”며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발생 시점의 소속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성추행 의혹이 있는 자를 영입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공색한 변명은 그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가 기본이다. 정읍시의회 회기가 시작되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읍시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된 것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하는 가해자 및 방임자들의 행태 또한 2차 가해다.

정읍시의회에게 즉각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또한 정읍시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기자회견문] 3월 26일 배포

정의당전라북도당이 담대한 정책으로 한국정치를 선도합니다

**경제위기도 조기 방역이 중요 더민주당 · 청와대는
코로나 긴급예산 191조 편성 응답해야**

- 1 코로나19 추경 191조(GDP 10%) 즉시 편성, 4월 중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 2 해고 금지
- 3 재난휴업기본소득(휴직자 휴업수당 전액) 즉시 지급(1인 평균 140만원)
- 4 재난수당 및 재난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보호
(법정휴업수당은 현금지급)
- 5 영세자영업자 기존 대출금 유예 및 감면
- 6 영세자영업자 무심사원스톱 코로나 대출 실행
- 7 재난 유급 육아휴직 부여
- 8 국공립 시설 긴급보육 지원
- 9 마스크 · 소독제 무상 배부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는 분이 속출합니다. 기약 없이 무급휴직하는 노동자도 속출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코로나19 못지 않게 당장의 생계가 두렵습니다.

어제 우리 도당에서는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아침 9시에 왔는데 이미 번호표는 150번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돌려보냅니다. 사람이 오가지 않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힘겹습니다.

노동 상담도 이어집니다. “공연이 취소되어서 생계가 막막한데 아무 지원도 못

받았어요”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월급을 줄 수 없다네요.” “회사가 고용지원금 자부담도 부담되니 무조건 무급으로 쉬래요” “한 달 벌 어 한 달 사는 서민으로서 법은 먼 곳에 있네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찔끔 확대한다고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자부담은 여전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지원금 받기보다 우선 자르고 보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대책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안이합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 11.7조원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GDP의 0.6%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에도 28조의 추경 했습니다. 2020년 경제위기는 2008년 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예산을 그 절반도 안세웠습니다.

정의당전라북도당은 가장 담대하고, 가장 과감한 위기 대응을 제안합니다. 당리당락을 떠나 지금 당장 GDP 10% 규모 191조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슈퍼추경 세우려면 국채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 계획 없는 지원 정책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고용을 지키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 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1,600조, 독일은 200조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해고를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5천 억불이고 국가채무비율은 40%여 서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당장 해고를 막읍시다. 임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여 재난소득을 지급합시다. 영 세자영업자의 대출금을 탕감합시다. 줄 서야 사던 마스크 직접 배부합시다. 소상공 인들 줄 서게 하지 말고 무심사·논스톱으로 지원합시다.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여당에 묻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10% 규모의 예산 편성,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각 후보들이 국채 발행 동의 서약할 것을 제 안합니다. 본선이 시작하기 전에 서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4월 2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확인
- [첨부자료] 코로나19 비상대책

코로나 긴급 대책
비상 상황 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 1 코로나19 추경 191조(GDP 10%) 즉시 편성, 4월 중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 2 해고 금지
- 3 재난휴업기본소득(휴직자 휴업수당 전액) 즉시 지급
(1인 평균 140만 원)
- 4 재난수당 및 재난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보호
(법정휴업수당은 현금지급)
- 5 영세자영업자 기존 대출금 유예 및 감면
- 6 영세자영업자 무심사원스톱 코로나 대출 실행
- 7 재난 유급 육아휴직 부여
- 8 국공립 시설 긴급보육 지원
- 9 마스크 · 소독제 무상 배부

0. 코로나19 추경 191조 즉시 편성

-4월 중으로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191조는 2019년 한국 GDP의 10% 규모임

-미국은 GDP 대비 9.8%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준비하고 있음

-국채 발행 계획 없는 경기부양책은 말잔치에 불과함

-해고금지를 전제 조건으로 휴,재직자 소득 지원

1. 해고 금지, 작은 사업장 월급 70% 국가 지급

-고용유지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놓아야 합니다

-일회성 재난수당으로는 경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방위적인 휴업/해고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 명 중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77.8%(2,127만 명)에 달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비정규직 중 29%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노동자 중 47% 고용보험 미가입)
- 정부는 휴업수당(월급 70%)의 90%까지 부담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작은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수령 대신 해고를 택하고 있음.

제안

- 한시적으로 60일 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해고 금지를 제안함.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 필요함.
- 고용유지와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휴업수당(월급여 70%) 전액을 국가가 재난 휴업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비상대책 발효(1인당 평균 140만 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주체에 노동자를 포함하고, 노동자가 신청 시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

※참고

이탈리아-60일 간 모든 해고 금지

영국-휴직노동자 급여 80%까지 정부가 지급

스웨덴-병가 낸 직원의 급여 정부가 지급

2. 신속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지원, 속도가 중요합니다.

배경

-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받으려면 매출 저하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해서, 시청, 소상공인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을 오가야 함.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 있음.
- 보증 제공은 결국 가게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임. 영세자영업자의 고정 지출을 즉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함.

제안

- 재난수당·재난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보호
(법정휴업수당은 현금지급)
- 영세자영업자 기존 대출금 30% 감면 및 상환 유예

- 영세자영업자 각종 공과금 일시 면제
- 영세자영업자에게 무심사·원스톱 코로나 대출

3. 마스크 전 국민 무상 배부

- 재난물품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경

-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고, 시장을 이용해 물품을 공급하다 보니 방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이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향후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생산된 마스크, 소독제를 파렴치한 업자들이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 필요

대책

- 재난 시 재난대응 물품(마스크, 소독제, 의료용품 등)은 정부로 생산량 전체를 일괄 납품하도록 하고, 지자체 행정조직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방문 배부하도록 체계 수립

※참고

부산 기장군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직접 배부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음

4. 재난 긴급 보육 지원

- 재난 상황일수록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배경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원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대란 현실화
- 여성이 퇴직하여 육아공백을 메우면서 경력단절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 준비 안 갖춰져진 민간 보육시설 역시 긴급보육 시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

제안

- 재난 상황 시 유급육아휴직 의무 부여
- 국공립 시설 활용하여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5. 기타

재정정책 우려에 대한 입장

일각에서는 재정위기와 환율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07년 3/4분기 -2,160억 달러였지만 2019년 4/4분기에는 +5,00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 채무 역시 40%를 밑돌고 있어 안정적이다. 97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당시보다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위기를 더욱 키우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전라북도당 4.15총선 판갈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상임공동위원장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

서유석 (호원대 교수. 교수노조 전북본부)

손인범 (익산 우리배움터 교장)

■ 공동위원장

염경석 (전주갑 후보) 오형수 (전주을 후보) 권태홍 (익산을 후보)

정상모 (남원순창임실 후보) 최영심 (전라북도당 선거대책본부장)

김성연 (전라북도당 부위원장) 안윤정 (전라북도당 부위원장)

안현석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장종수 (전국화학섬유연맹 전북본부장)

■ 공동부위원장

• 전주 : 신민찬 이진섭 임현정(운영위원) 서윤근(전주시의원)

• 익산 : 이교삼(익산 조직본부장) 조상익(룩스 필하모니 음악감독)

송호진(전 익산산시의원) 유재동(익산시의원) 김수연(익산시의원)

최기재(전 익산시의원) 최재철(장점마을 대책위원장) 김정열(전국위원)

• 남원임실순창 : 박순천(지역위 부위원장) 김수환(법무사)

• 군산 : 정지숙(군산시위원장) • 정읍 : 유석기(정읍시위원장)

• 완주 : 백학윤(완주군위원장) • 무진장 : 윤재득(진무장위원장)

• 여성 : 허옥희(전주시의원) • 장애 : 심지선(장애인위원장)

• 노동 : 정광수(노동위원장) • 농민 : 이종진(농민위원장)

• 환경 : 한승우(환경위원장) 김형균(새만금시민생태조사 단장)

• 문화예술 : 고양곤(문화예술위원장)

• 청년 : 한상구(청년학생위원장) • 청소년 : 이찬영(청소년위원장)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일부터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정의당의 시간을 만드는 힘은 정의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던 노회찬 대표의 말씀을 실천하려 합니다. 21대 총선승리를 위하여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전북판갈이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15명의 선거대책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향후 IMF시기의 경제여파를 능가하는 ‘코로나양극화’를 불러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정의당다운 행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을 지키는 최전선의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밀착해, 함께하고 말해주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위기가 올수록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결국, 정의당의 최고의 선거 전략은 노회찬 대표의 ‘6411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기성정당과는 태생부터 다른 정당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사회적약자인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들과 도시 서민들과 함께 불평등사회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달려온 정당입니다. 말로는 진보개혁세력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친재벌, 부자들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가짜 개혁 기성정당과의 구별을 이번 총선을 통하여 유권자들께서 해주실 것이라 봅니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선거이자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정권심판이나 야당심판이나는 언론이 만들어 내는 구도일 뿐, 이미 선거의 이슈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제1당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불과 1개월 전에 여당이 목소리 높이던 공포마케팅도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의 선거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연동형비례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예상했던 목표를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양당 정치를 넘어 한국정치의 삼분지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으며 전북 지역에서 20% 이상의 정당지지율과 지역후보의 당선을 위해 판갈이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의 각 지역과 영역에서 거침없이 펼 것입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판갈이선거대책위원회는 당원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을 지지하고 진보정당의 전진을 바라는 외부의 각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다양한 인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당의 선거대책본부와 투트랙으로 정의당의 총선승리를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4.15총선 판갈이 선거대책위원 415인

<전주>

양세빛, 명 철, 최정의, 조정란, 박병숙, 민기범, 강월성, 김명수, 김봉수, 송민정, 김용관, 정성용, 최형순, 박미경, 신성주, 이인희, 김삼립, 김상희, 박기수, 김은아, 박영순, 신기록, 임동식, 장영주, 최민귀, 한병준, 이순자, 김종선, 김지은, 정동열, 고영태, 안도현, 정희준, 최형순, 이택수, 허철민, 박래안, 진두환, 김대신, 신 나, 권우석, 김은영, 신금순, 정정임, 조동현, 이은미, 조은혜, 김경이, 김순례, 양현성, 김석곤, 소원석, 조기현, 박 환, 이선규, 서민희, 유해숙, 김민정, 탁병복 (이상 49명)

<익산>

조정권, 권주호, 이치현, 양승무, 최상기, 박용모, 김명삼, 장시재, 조경훈, 임종석, 김태우, 박기윤, 양재석, 한경순, 이재민, 구창서, 이해경, 민찬, 지상열, 김기환, 김성덕, 김건오, 박진표, 최미애, 고은순, 김소연 (이상 26명)

<남원임실순창>

김수환, 박영관, 김완순, 고천규, 서영배, 반효정, 박창근, 한병초, 이강운, 조혜정, 윤덕희, 장금산, 이승우, 심병구, 박효근, 장기봉, 강재형, 김광수, 최선미, 정미소, 김선아, 정태선, 조인수, 양정열, 송정란, 정선호, 장윤기, 장세화, 김희성, 이정복, 윤태호, 장윤석, 노영숙, 김관희, 박성규, 정초아, 정지우, 정미혜, 박기영, 김수경, 최낙식, 황호동, 이경섭, 김명환, 유수남, 박수진, 여태구, 김광수, 최영수, 김판임, 현영식, 조지훈, 조삼호, 홍인표, 박정용, 김범용, 윤수민, 이광석, 청도, 강경식, 윤태호, 서경완, 송정준, 김점철, 김태현, 김무승, 정상용, 허영기 (이상 68명)

<군산>

박미란, 김주은, 김성훈, 강영희, 주준자, 채공석 최명자, 이일재, 이종길, 박완남, 이희전, 전복녀, 김규철, 추안순, 최연봉, 이일근, 박선애, 김명화, 이현준, 김순정, 박종만, 서대근, 송재영, 배점순, 김경희, 강명식, 정해경, 오현주, 고안나, 김정복, 이준규, 남상규, 전수경, 강성연, 강길자, 김주홍, 박선옥, 최일권, 이병로, 김정옥, 황안나, 최은열, 최다희, 정현숙, 최경호, 김영삼, 김예슬, 이상호, 강철승, 강영례, 박원경, 김세중, 백형근, 전남일, 강판길, 채해순, 방미라, 김은영, 김한빛, 유승로, 정귀남, 이재순, 정명옥 김영희, 한광수, 강숙, 정영술 (이상 67명)

<정읍>

서상원, 한정숙, 신철균, 정희모, 최정인, 한병옥, 김원영, 박성남, 한병환, 송정아, 장은실, 이근홍, 최병득, 김진영, 김대현, 방경은, 박진영, 최미정, 남궁윤배 (이상 19명)

<완주>

문태식, 황재근, 심우석, 김윤희, 김준호, 임용현, 김정윤, 박원석, 한재훈, 유춘기, 오성덕, 고경화 (이상 12명)

<노동>

국종균, 진영석, 오영순, 안종필, 편상필, 김낙찬, 박철용, 김영완, 이정희, 윤동규, 김광택, 송석의, 전현규, 구재남, 민효준, 민홍기, 신동기, 강상대, 오현석, 김정배,

이호연, 한철호, 문철성, 조문곤, 정훈학, 두창훈, 김남희, 양상환, 김영록, 임성희, 이준상, 조혜진, 이상구, 김기자, 공영옥, 여은정, 유기만, 송지나, 김동규, 오정민, 이장우, 오정심 (이상 42명)

<문화예술>

김춘숙, 안은정, 장미, 박정일, 김남기, 박종석, 박정임, 박선자, 정경희, 전재강, 정대기, 홍순구, 박종덕, 정영찬, 강진학, 이창선, 조인균, 손경은, 김창주, 김민성, 최구임, 이경해, 정현미, 이완우, 손진, 윤왕호, 강윤아, 황혜지, 조용오, 박영순, 곽영종, 안세형, 김성택, 이길재, 유재준, 최경희, 고조영, 김가히, 박미선, 김창수, 김성민, 최용관, 유관희, 배건재, 전희상 (이상 45명)

<농민>

한상돈, 강신호, 김형준, 이정교, 최민성, 고영귀 (이상 6명)

<여성>

고은하, 김영심, 양복심, 김선아, 채옥경, 김익자, 안부자, 김봉숙, 오미나, 신명진, 이은희, 김동준, 안봉순 (이상 13명)

<장애>

유승권, 서화석, 정광주, 강신원, 강민, 송호천, 김종수, 안명수, 박민영, 이기수, 김우태, 이연호, 장윤성, 오미광, 박명철, 조수연, 강현석 (이상 17명)

<청년·청소년>

임형준, 박선희, 김윤진, 김고은, 이나래, 양수연, 박준민, 이승현, 최지웅, 서동현, 유석훈, 박지환, 손종명 (이상 13명)

[논평] 3월 30일 배포

**총선후보자들이 방송토론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이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법정토론 외에는 타 방송사의 TV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들이 여럿이 있다. TV토론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검증을 마쳤다는 것인가? 아니면 벌써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으로 본 선거를 요식행위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로 선거구 주민을 직접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들은 TV토론이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후보로써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토론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역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우습게 알고 TV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들이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그들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전북도민들을 패싱하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특권을 챙기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30년간 지속된 일당 지역독점의 폐해를 바꿔보자고 정의롭게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기득권 정치가 쌓아놓은 적폐카르텔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토론방송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른 후보들의 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론을 거부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불이익이 가야하는 것이지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보도자료] 4월 3일 배포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전북 방문해 지역구 후보자 유세지원 및
코로나19 위기 살피며 민생행보 이어가**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4일(토) 전북을 찾아 정의당과 정의당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현장을 방문한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방문 첫 일정으로 꽃발정이 네거리(전주 평화동)에서 전주시갑 염경석 후보, 전주시을 오형수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한다. 이어 탈시설(장수 벤엘의집)해 평화동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한다.

이후 익산으로 이동해 북부시장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와 관련한 민심을 청취하고,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익산시을 권태홍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10년동안 유해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낭산폐석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2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 출정식에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대한민국 정치를, 위헌적인 꿈수정치 대신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를 과감한 개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4월 6일 배포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예산·교육보조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학사일정의 차질과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교육당국이 온라인 학습 등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으며, 개학시기에 맞춰 급식재료를 생산하던 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개학연기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각 학교의 식재료 급식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줄 것을 전북교육청에 요청한다. 전북교육청은 2020년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급식예산을 증액하고 고교급식까지 하려고 추가편성하였으나 각 학교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전주형 재난기본수당보다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각 학교에 쌓여가는 급식예산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노동자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2~3일간의 급식재료를 꾸러미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가정에 전달은 개별 포장된 꾸러미를 학생들이 직접 가져가게 하거나 원거리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때에 꾸러미가 전달되게 하면 된다.

또한 개학연기로 각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수입이 아예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없다. 기왕의 온라인 학습과정에 방과 후 지도를 흥미롭게 꾸며 전달하는 방안과 방과 후 강사들에게 교육현장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제주체로써 정상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본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15총선의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의 '의원꺾주기' 때문에 공보물 인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까지 정의당은 자당의 기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기호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보물에 6번 기호를 넣지 못한 정의당은 불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삶을 골고루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고 그런 정당들 간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 시대를 열자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넓게, 더 깊게 만드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정치는 협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없어졌고 조각처럼 흩어졌다가 총선을 앞두고 급조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또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 당은 아마 총선이 끝나면 없어질 당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원플러스 원(1+1) 할 인증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을 보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뿌리는 하나입니다. 전북지역에서 30년간 지역독점세력으로 권력을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 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뺄만 믿고 나온 민주당의 후보들은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많습니다. 아마 총선 이후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정한 법정토론 외에는 타 방송사에서 섭외하는 후보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처럼 그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슬로건을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손쉽게 승리한 적 없습니다. 우리 사회 수 많은 시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삶을 꾸려가듯이 정의당은 시민과 함께 두 손 꼭잡고

힘겹게 힘겹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으면 전례가 없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수당 지급, 중소기업 50조 무이자 긴급대출, 임대료 3백만원 3개월 우선 무상지원 등을 정의당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긴급 제안한 안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당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에서 GDP의 10%인 191조의 슈퍼예산을 긴급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에 100조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죽이고 기업만 살리는 IMF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지하겠다는 기업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자 해고가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한다면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소득 격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경제 약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약자들은 위기에 내몰릴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재벌의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 규칙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낡고 불공정한 규칙들은 버리고 공정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규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어떤 당이, 어느 후보가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과 도시서민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색깔만 바꾼정당과 위성정당, 꿈수정당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몸통은 하나입니다. 20년의 진보정당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한국사회를 진보하게 한 정당 정의당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전북도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익산왕궁에 코스트코 입주를 반대한다

익산왕궁물류단지(주)는 익산 왕궁면에 미국계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주)는 45만여 m²에 이르는 면적의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코스트코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며, 공사는 4월에 착공 예정이라는 보도이다. 이에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익산왕궁 코스트코의 입주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익산왕궁에 코스트코가 입주하면 전북지역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코스트코의 유치를 추진하는 장소는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익산IC의 입구이다. 익산시청으로부터 약14KM 떨어져 있으며, 전주시청에서도 약18KM 이격된 위치이다. 사실상 전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산에서 33KM, 정읍 51KM 등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코스트코가 입주한다면 익산은 물론, 전주와 전라북도 모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최악의 경기상황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코스트코 매장이 16개 운영 중이며,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조원이 넘는다. 매장 평균 연매출액은 2,612억원으로 익산시 대형마트 3개의 연매출을 합한 1,645억원(2015년 기준)보다도 훨씬 높다.

2. 코스트코는 지역자금의 해외유출로 전북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코스트코는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으로 값싼 미국의 공산품과 식품을 직접 수입·판매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농식품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지역자금의 해외유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국내 대형마트와 유통점들이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익을 모두 서울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코스트코까지 익산에 입주한다면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지역재화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농민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최악인 전북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GMO가공식품 최대 유통회사, 코스트코의 입주를 반대한다.

코스트코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한다. 특히, 코스트코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GMO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통회사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코스트코 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1만9042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GMO가공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코스트코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값싼 GMO가공식품들이 아무런 표시 없이 국민들에게 무차별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코스트코의 제품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상위 5개 업체별 GMO가공식품 수입량(kg)

업체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주)코스트코 코리아	2,776,590	4,042,031	3,360,464	3,293,145	5,570,291	19,042,521
주식회사 비케이알	762,185	1,997,441	1,637,495	1,987,241	2,338,097	8,722,459
(주)오성물산 코리아	-	-	-	-	8,298,692	8,298,692
(주)이마트	118,276	209,430	354,116	2,037,583	2,801,953	5,521,358
(주)모노링크	334,241	469,493	562,537	735,932	2,037,704	4,139,907
소계	3,991,292	6,718,395	5,914,612	8,053,901	21,046,737	45,724,937
수입량 대비 5대 업체 비중	29%	37%	31%	30%	2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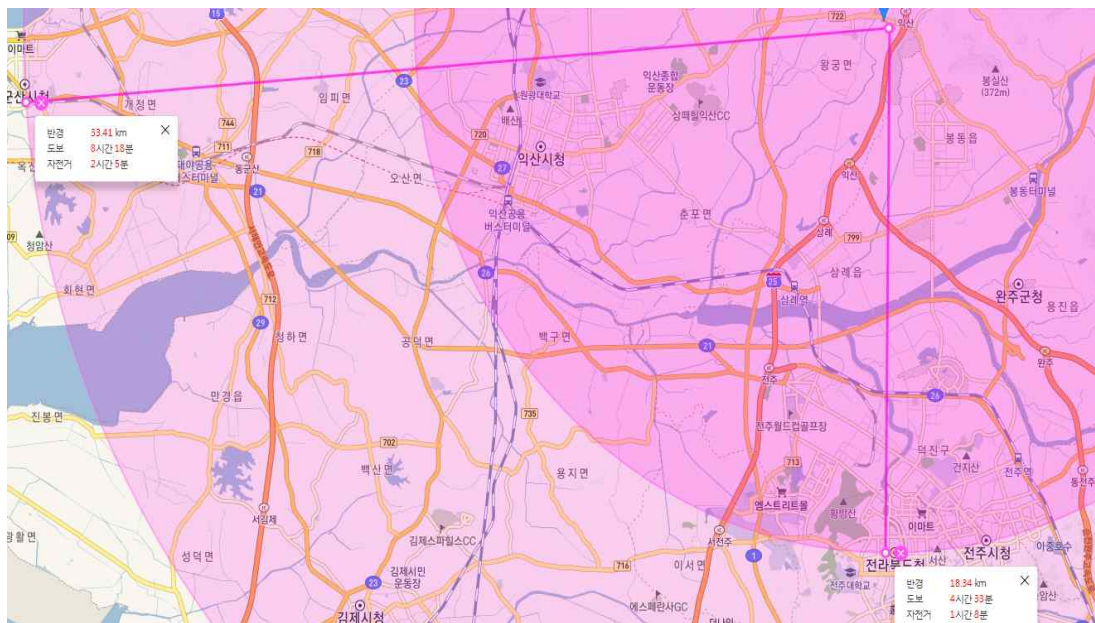
그림 22 .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

4. 전라북도 국회의원 후보와 자치단체는 코스트코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익산왕궁의 코스트코의 추진에 대하여 익산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전북지역의 소상공인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왕궁의 코스트코 입주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스트코 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익산왕궁 코스트코 위치도>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성명] 4월 9일 배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살리는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확대 시행하라

대표적인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 민족에서는 지난 4월 1일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제기와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자 입장을 변경했다. 그간 고정금액의 광고료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배달 건당 매출액 기준 정율제로 변경하여 자영업자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매우 크게 늘렸던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적어도 2.5배에서 5배까지도 배달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의 배달어플이 9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상표의 회사)이 독일계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전격 매각되면서 하나의 거대 공통 배달앱 기업이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을 독점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과 정의당에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경쟁자나 협상의 대상도 없어 수수료인상 등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배달앱 시장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배달앱 사용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3조원 규모로 불과 5년사이에 10배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생활의 패턴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그 성장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거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이다. 이럴 때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히려 수수료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달의 민족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그 말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가 급격한 가운데 수수료 인상개편안 발표와 철회라는 해프닝이 있었고 자영업자의 불안감과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의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에는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개발 시행의 의지가 언론에 발표된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

이용 당사자이며 비용당사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삶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나의 기로에 놓여있다. 개업과 폐업의 통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지 이미 오래다. 이에 정의당에서 진행한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코로나19여파로, 매출의 50%~70% 가량 떨어졌다고 하는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이고, 이 상황이 6개월에서 1년이상 갈 것이라 보는 자영업자가 70%를 넘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및 각종 고정비용 부담은 대책이 없으며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이런 때에 업체는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고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을 주장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은 정의당의 자영업자 정책 중 하나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도 함께 주장해왔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내 군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군산시는 27만 인구에 연 1조의 예산 규모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로서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 20%의 경제를 차지할 만큼의 비중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9년 1년여의 개발 끝에 현재 3,000여 요식업종을 사용자를 기준하여 배달어플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현재 7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하여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 중이다. 유지·운영비는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어플사용자인 점주들은 오토바이 쿼비만 부담하고 수수료는 없다. 쿼비 결제시 지역사랑 상품권과도 연계하였고 택배가 필요할 시 택배도 마찬가지로 원리도 사용하면 된다.

정의당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공공배달앱 구축과 이를 지원할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산소호흡기라면 공공배달앱 구축은 이후 생존을 도와줄 받침대가 되어줄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은 방향과 속도가 함께 가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 쪽 일방이 독식하는 구조는 안되며 지금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지금 당장 공공배달앱 도입이 절실함을 주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논평] 4월 10일 배포

더불어민주당은 불량식품을 반품해야 한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공포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선거전략이었고 전북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에 정치 거목이라는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있으니 가히 민주당의 바람은 태풍급이다. 이러한 판세는 선거운동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만만 내세운 후보들은 불량식품이 많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먹은 전북도민은 선거 후 불량후보를 지지한 것을 후회할거고 재선거 등으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불량후보들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포장지에 숨어 포장지를 뜯지 말고 먹으라 강요하고 있다.

전주시병 김성주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거구에 상품권 살포도 모자라 도의원시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입찰단합이 상대후보로부터 폭로되었다. 참으로 안 좋은 불량식품이다.

전주시을의 이상직후보는 작년 명절선물 살포가 중진공 이사장의 고유업무라고 강변하는데 불량식품이 썩어 악취까지 난다. 전주시갑의 김윤덕은 극우 뉴라이트 조직과 관련이 있어 여기가 경상도라면 친 박근혜당 후보에 적합한 후보가 오염된 진보의 탈을 쓰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강래 후보는 요금수납원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수많은 법의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집단해고한 칼잡이다. 익산시를 한병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장 빨리 폐기되어야 할 불량품이다.

집권여당의 오만함으로 썩은 식품 내놓고 비례위성정당으로 꿈수의 정점을 찍어 우리 전북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품대상이다. 아무리 총선이 바람선거라지만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하겠다는 정의당의 품질 좋은 후보들이 알려지지 않아 유권자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문재인정부의 촛불 사회개혁을 견인할 힘은 정의당에서 나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4명의 지역후보가 출마하여 정당지지 득표 20%이상과 1명 이상의 지역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오늘 자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처절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골목까지 정의롭게 뛰어다니 후보들과 지역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정당득표를 한표라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각 지역위원회의 당원동지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따듯한 미소로 정의당을 응원해주신 전북도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높은 사전 투표율로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던 낡은 국회를 변화시키는 선거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의 1당과 2당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남은 유일한 변수는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의석 몇 석을 얻을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따라 21대 국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정의당의 후보들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몰표는 오히려 오만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정의당 총선 후보들이 제1야당의 후보로서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함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가 이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정치는 늘 국민들을 상대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을 선택할 권리’를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을 뽑으면 정의당이 됩니다. 정의당은 비례 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일회용 텃다방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입니다. 정의당에게는 원칙이 있고, 정책이 있고, 오랫동안 훈련되고 검증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그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면, 대한민국 개혁을 견인할 힘 있는 진보 야당이 생깁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는 21번 스톱했습니다. 썸박질하느라고 아예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것이 21번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들이 날 밤 새가면서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치달는 양당 체제 가지고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를 이뤄나가자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목매고 온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심과 국민들의 기대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대기업 독과점 방지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조금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 30석을 탐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서 의석을 도둑질하러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점포 2개나 거느리며 총선을 치르고 있어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IMF 때를 생각해보면 국민 세금으로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기업을 살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해서는 안되며, 불평등해소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고 일자리 지킬 것입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그 생업을 지킬 것입니다. 이미 실업 상태로 내몰린 일용직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들, 강사 등 그 수많은 준 실직 상태에 있는 시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의당이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개혁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임을 자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인천 공항으로 달려가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을 앞에 두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규직화는 무늬만 정규직화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기는커녕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노동자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와 같은 참혹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해서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2의, 제 3의 김용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개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의당은 선거기간 내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 누구도 이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정의당이 있어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량 해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폐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시간은 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정당, 정의당에 투표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2020년 4월 14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4월 16일 배포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코로나19 양극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촛불 혁명 후 치러진 첫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미래통합당과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촛불 개혁을 진실로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말고 개혁하라! 그것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민 열 분 중 한 분 이상이 우리 정의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마케팅과 반칙 위성정당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의 짝퉁 전략에도 정의당을 지켜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개혁 와해 등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습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낡은 지역구도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4명의 지역 후보들은 악전고투하면서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남원임실순창, 익산을, 전주갑, 전주를 4개 지역의 지역 선거 결과는 뼈 아픔입니다. 후보들의 비전과 능력에 비해 매우 저조한 득표율에 전라북도당의 당원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실력을 키워 더 넓게 더 깊게 더 강한 정의당의 정치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총선 공간에서 전라북도당과 각 지역 후보들이 내놓은 알찬 공약들이 묻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이행되도록 전북 제1 야당으로써 정치 활동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가 남긴 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참사에 희생된 영령들이 남긴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더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해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편에서 정의당의 정치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논평] 4월 26일 배포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방향과 속도가 달랐다

전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만명의 시민들에게 527,000원씩 지급 하겠다던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고용절벽과 소득감소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 칭찬할 만한 선제적 대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참 요란하게 발표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민들에게 긴급 지급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긴급한 재난시기에 긴급 처방을 하겠다는 목표가 전주시장의 발표와 의회의결까지는 전광석화였으나 이후 속도가 늦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처음 화려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초라해져가고 있으며 이젠 시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이 되었다. 남은 것은 언론에 비춰진 전주시장의 화려한 빛이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홍보현수막으로 전주시내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선전한 내용에는 지역건강보험료 47,260원, 직장건강보험료 74,670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들일 수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내밀한 처지를 드러내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노출을 무릅쓰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추가서류를 요청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항의하기도 머쓱해 그냥 나오면서 쏟아지는 여러 눈빛을 피해야 하는 경험을 한 시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곳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제는 지급대상자 5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하고 마무리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전화와 민원응대를 일선에서 수행하면서 여러 수고와 스트레스를 견디어낸 공무원들께는 감사할 따름이다.

2020년 4월 26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더불어민주당은 본심을 밝혀라

전북도청에서 일을 하는 시설·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공무직) 과정에서 오히려 임금 등 처우가 하락되고 15년 동안 지켜온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4월 24일 이의 문제해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정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도청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임원들이 사지가 들려 후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지사로서 전북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면담을 요청하고 도청을 방문해 기다리고 있다면 전라북도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첫발을 떼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면담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전북지역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지를 들어서 도청사 밖으로 끌어내어야 속이 시원했는지 묻고 싶다. 이쯤 되면 전북도지사는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조혐오를 도정지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선 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였다. 이후 노동존중과 포용적 성장을 국정지표로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을 무리 없이 해냈다. 또한 전주시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지자체장들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원래부터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화는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의 거부로 아직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 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으니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맹약은 없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길 바란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선거때만 되면 립써비스로 써먹는 슬로건인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의 여러 지자체장들은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송하진 전북도지사만 노조혐오가 자기 소신이어서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민주노총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에서 거대여당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후가 아니길 바란다.

2020년 4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의혹과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전라북도 13만 장애인들을 대표해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심지선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부정비리에 따른 진정서를 지난 4월 9일 전주지검에 접수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각종 비리와 탈법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하루라도 빨리 불평등과 소외에 눈물짓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협회로 우뚝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과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에 대한 다음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지길 촉구합니다.

-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행세 의혹
-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직무대행)의 보조금 탈법행위 의혹입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 김모씨는 수 십 년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장애인잔을 받았으나 지금은 걷는데 장애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각종 행사 때는 여러 회원들 앞에서 뛰어난 족구실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북장애인사회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의 회장으로 행세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2020. 2. 24.일. 인후3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직권재판정 통보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누려온 각종 기득권을 지키고 탈법 불법으로 자행해온 이권들을 계속 누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기왕에 행정기관이 처한 장애 직권재판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를 강

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그는 2013년 1월 28일 ~ 2018년 4월 1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아인협회 전북 협회장으로써 보조금 착복과 횡령, 여비성 경비의 부정사용 등 상습적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한국지체장애아인협회 전복지장협회장으로 구축한 정치적, 사법적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지선 위원장은 김모씨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심 위원장의 지인들에게 심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 원에 대한 정보파악을 행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도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복지체장애아인협회가 각종 비리의 복마전인 것도 모자라 협회장의 가짜 장애인 의혹에 휘말린 이 웃픈 현실에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은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아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행세 의혹과 장애인단체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전북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 박종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은애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 회장, 심지선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첨부: 진정서(발췌) 1부

2020년 4월 2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4월 29일 배포

더불어민주당의 자정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선거대책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도의원이 당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인 당원들에게 밥값과 차값으로 지불하였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돌려주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또한 작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되자 해당시의원은 꼬리자르듯이 탈당하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에 너무 도취 되어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북도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인 도의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의 일탈 금권부정선거행위에 대해 조사계획이 없다고 하고 자당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속죄의 조치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개혁·진보주의자들로 가장을 하여 얻은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30년 넘게 지역독점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이 문재인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전북도민의 표를 싹쓸이 해갔으면 이제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지키기와 미루어진 개혁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란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모금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빠르게 조사하고 위법의 여지가 있으면 선거사범으로 고발하여 엄벌하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공공보건·공공의료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전-국민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당리당락적 차원의 욕심들 때문에 국가질병재난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공공의대설립문제가 20대 국회 내 처리가능성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묘연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다. 이 기간 안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기를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 된다. 현재 4월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회기는 5월 15일까지다. 5월 임시회 가능할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4월임시회 기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사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번에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태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 발의하여 당·정·청 협의에 의해 추진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약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20대 국회의 반드시 처리해야할 필요한 법률안임을 인지하고 꼭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여·야를 떠나 그리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 재난상태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임을 모두가 인식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해결을 촉구한다.

야당과 의료계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대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21대 총선 선거전에서 보여주었던 각 당과 후보들은 진정 지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다짐과 결기를 바탕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통하여 거대여당으로 태어난 민주당이 국민보건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8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오늘날 참 스승은 누구인가?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역사와 민주주의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법외노조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박탈당한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는 하루빨리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6.17.), 국가인권위원회(2017.12.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7.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11.20.)와 국내외 법학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잘못된 위법 행정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여야 한다.

1989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수만의 교사들이 교단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31년이 되었다. 결성 초기 불법 교원단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으며 수백명의 교사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결성된지 10년만에 김대중 정부시절 교직원노동조합설립특별법을 통해 노동 2권(노동조합 결성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합법노조가 되었으며, 많은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해직 기간의 불이익은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

돌아보면 전교조는 지난 30년 동안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실천을 해 왔다. 예컨대 학교현장의 민주화, 촌지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도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개혁, 정치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인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전교조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헌법적이자 불법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공작으로 법외노조로 전락시킨 이명박 박근혜는 죽을 때 까

지 역사적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최근 언론보도(한겨레21 5월12일자)에 따르면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 단체화 보고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보수단체에 수억원을 지원하여 집회를 하게 하고, 전교조 탈퇴 서한 발송을 위한 비용도 지원 하는 등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공작정치가 있었다고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공작 정치이자 민주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이명박 정권을 이어 박근혜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하는 사법농단을 통해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하였다. 6만 조합원 중 고작 9명의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빌미삼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라는 행정명령 하나로 6만 조합원이 가입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키고 노조와해 내지 노조약화를 노린 정권차원의 공작을 자행하였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 반노동적인 정권의 만행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억압하는 정권의 공작정치는 반드시 청산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민주공화국이 지향하고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다.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란 위헌 위법적 행정명령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당연히 청산하였어야 할 적폐이자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하루빨리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행정부의 위법행정이 시정이 안 되는 사이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법적 소송문제로 비화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으며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2013년에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국정농단 사안 중 하나이자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촛불혁명 이후 진즉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판결을 하겠다고 하나 사법 정의를 위해 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지신들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임을 대법원은 하루빨리 판결로 밝혀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위법 처분으로 전교조 조합원중 해고자

는 9명에서 34명으로 3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시정조치 미이행과 공약 불이행으로 전교조 해고자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6만 전교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를 하루빨리 원상회복 시키는 일이 행정부 내지 사법부의 역할임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정과 판결을 바란다.

2020년 5월 15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5월 26일 배포

오리온은 ‘익산공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리온 청년노동자가 고인이 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등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오리온은 ‘정’이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앞세워 전 국민에게 호감을 받아 온 대표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괴롭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선전해 오던 기업 이미지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는 약했고 일방적인 합의 시도로 인해 오히려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까지 하였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자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된 모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역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오리온 청년노동자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며 고통받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 의욕이 감소하고 직장을 퇴사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해본 경우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3347건 중 검찰에 송치된 것은 22건이라고 한다. 처벌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법률에 정한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오리온의 경우처럼 미온적이거나 사실을 축소 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사업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중앙당과 연계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6월 19일 배포

**우수의정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수당 중심의 나눠먹기 선정은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의정 대상은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8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 상의 취지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동료의원에게 모범이 되는 의원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 중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14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회는 2019년도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고 올해도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문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의원 선정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추천과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추천하고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는지 모든 의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작년과 올해 6명의 선정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무소속이거나 소수정당 소속이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정치적 안배를 통해 나눠먹기식의 수여제도 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소속의 최영심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5분 발언 15건과 대표 발의 조례 1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32건을 발의해 전체 도의원 39명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의정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선정 기준과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으니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고 추천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의원들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수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보도자료] 6월 29일 배포

현실적인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정의당전라북도당 1인 시위에 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라인강의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행사 취소, 시설 미이용 등으로 인해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 차액으로 실제 등록금 피해 규모를 가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의 자구적인 등록금 반환 노력에 대해 정부가 매치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의당 안’은 9,097억 원 편성에 50대 50 지원인데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이다.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정부 방안은 대학생들의 절박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또 대학 당국도 아무리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 29일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원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게 된다. 이에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현실적인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도내 14개 대학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상징적으로 오늘 29일부터 전북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보도자료] 7월 2일 배포

이상직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전북도민에게 사죄하라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전북 현역의원이 기록되지는 않기를 바라며

전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전주시 을 지역구 이상직의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250억원 수준의 막대한 임금체불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은 이스타항공을 향토기업처럼 아껴왔던 전북도민들에게 뼈아픈 배신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7년간 경영에서 손을 뗐다’며 되지도 않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이 임금체불 외에 배임, 편법증여, 탈루, 선거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은 불법과 탈법의혹에 휩싸여 국민들의 지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불법적 의혹들에 더불어 지난 총선 시기 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천특혜시비와 정권핵심 연루설 등은 소위 ‘이상직게이트’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출처 없는 소문까지 떠도는 상황이다.

이상직 의원에게 고한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모든 불법과 의혹에 대한 진상해명과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이상직 의원이 뚫어야 할 것은 황방산터널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피멍이 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답답한 가슴이어야 한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즉각 전라북도당 이상직 당원과 관련된 모든 불법과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더 이상 이 사태로 인한 부끄러움이 도민들의 몫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전라북도당의 자정능력을 통하여 전북지역의 현역 의원이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으로 기록되는 참사는 막아내 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장혜영의원의 대표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 늘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 성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번번히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국민과 함께 법 제정을 해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당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입법과제와 방향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종교계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캠페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국회 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전라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주요 지점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근선전전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1차 집중행동 기간인 이후 2주 동안 각종 오프라인 캠페인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보도자료] 7월 17일 배포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인권 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라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지난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며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실천활동으로 당원들은 출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에서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부결되었다. 참석의원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3명이라는 결과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나인권 의원의 반대 발언은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내용과 수준이었다.

나인권 의원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할 의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용의 혐오 발언을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여과 없이 읽어내렸다.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향한 그 혐오 발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는 무서운 폭력임을 나인권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인격은 자기가 선택한 발언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또한 번의 막장드라마를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보았다.

나인권 의원의 이런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나인권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가짜뉴스를 유포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시킨 나인권 의원에게 대해서 징계를 포함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회는 부결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지고 청소업무대행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전주시는 지난 21일 청소 대행용역업체 (주)토우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계약해지는 환영하나 청소 대행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주)토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나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들이 토우나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등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일 지역 언론의 취재 결과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우의 사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실질적 토우 경영자인 토우 대표이사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도 또 다른 전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사장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

이들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시와 토우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면서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우는 2008년에서 2016년 민간위탁 기간동안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고 2017년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사후정산을 하였으나 전주시는 정산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시가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동안 토우는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예산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해 왔다. 토우의 불법 행위와 예산 횡령 등으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전주시는 토우를 포함하여 12개의 업체에 청소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과연 토우에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토우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왔는지 의문이다. 다른 청소대행업체를 향한 의혹과 의심에 대해 전주시는 일괄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승수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유착 의혹,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행정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직영 전환을 통해 전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7월 22일 배포

성소수자 혐오선동 나인권의원은 사죄하라!

정의당전라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권의원(김제시)에게 도민 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전라북도당에는 나인권의원에게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공식적인 의회 본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저열한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나인권 의원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이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개인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등 혐오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또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전라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나인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1인 시위는 전라북도의회 앞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민주당 전라북도당과 나인권 의원에게 대한 공동 대응을 할 것이며 전라북도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 전북은 장애인 인권침해 왕국인가!

무주의 사회복지법인 하은복지재단 산하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옷걸이로 (피해 장애인의) 등을 후려쳤다’, ‘요즘 아주 기세등등이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SNS 대화를 나눈 정황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이 정도 수위의 대화가 대수롭지 않게 단체대화방에서 나뉘질 정도라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학대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히려 이 사건을 가해 복지사와 피해 장애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에는 연대소식, 직원채용 홍보 등이 게재되어 있다. 장애인 학대·폭력사건에 대한 접수사례나 처결사항, 사후대책 등의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전라북도는 위탁공모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부를 선정하였다. 이 단체의 장은 보조금 비리혐의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를 맡긴다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전북도가 해당 단체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하은의집 사건 이외에도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뽕엘장애인의집 등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전북도청을 비롯해 지자체, 수사기관,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가해자측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핑계대며 뒤로 숨기에 바빴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장애인 학대사건은 의지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속되는 학대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과 인력부족은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학대, 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헌법의 가치를 전북도와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기관의 무능과 지자체의 침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감내하고 있다. 특히나 시설 내 장애인들은 온갖 학대와 폭행의 환경에 내몰린 채 음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요구한다!

전라북도청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전라북도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라!

전라북도청은 선정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을 중지하고 직접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인권피해 관련 신고내용과 조사상황, 처결사항과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정부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전국의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외부감사 및 운영 감시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8월 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라북도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운영하라!**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전북지부) 직무대행인 김씨는 2013년부터 지장협 전북지부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편의시설센터 운영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밝혀져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장을 사퇴했고 검찰에 고발도 되었으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1월에 다시 도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김씨는 수십년 전 한때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비장애인으로 도보하며 활동하고, 각종 행사 때는 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족구 선수로 맹활약하여, 장애인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미를 자랑해 왔음에도, 이를 속이고 장애인 재진단을 받지 않고 영구장애인으로 행세하며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2020.2.24.일. “인후3동주민센터”로부터 장애직권재판정 명령이 내려지자 본인은 영구장애진단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공식석상에서 특정 회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감히 일개 회원이 메이저급 회장에게 덤빈다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고 큰소리를 쳤으나 8월 초에 장애 미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장애미판정 결과가 나온 즉시 장애인 관련 업무에서 물러나야함에도 현재 그는 장애인들을 우롱하듯 도협회장 및 전북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편의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의 답변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에 대한 의혹과 가짜장애인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진정한 심지선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장협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또

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벤엘장애인의집에서의 장애인 학대사건 그리고 얼마 전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에서, 김씨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복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고 장애인의 피해와 차별을 외면해 장애인 단체장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그 자격시비의 중심에 서있기도 했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청은 가짜장애인 의혹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씨가 직무대행으로 있는 지장협전북지부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지장협전북지부를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는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행 지체장애인협의회 정관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각 지역의 지회장을 지명해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즉, 지체장애인협의회 중앙회장에 임명이 되면, 곧바로 전국 각 지역의 지회장의 임명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측근이나 지인 심지어는 가족이나 혈연관계의 인사까지도 아무런 제제나 검증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내부의 비민주적인 조직체계의 문제로 앞으로도 부정과 불법 그리고 온갖 비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장애미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군립하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장애인 회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적절함에 우리 장애인들은 수시로 중앙회장 및 지회장 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묵인 속에 항상 무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들이, 정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소수 장애인 단체 지도부와 구성원들의 돈벌이와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들의 대외과시용으로 동원되어지는 장식품 정도로 전락한 현재의 장애인 단체의 현실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모습인가?

이번에 전복지장협회장 직무대행 김모씨의 장애미판정으로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것인데 인적쇄신을 이루어 김모씨의 측근들과 관계없는 인물로 공정하게 임명

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단체라 하면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사수하고 보장받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특정 단체장과 그 수하 및 직원들의 개인적 출세와 돈 벌이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장애인단체의 모습을 청산하고, 진정한 장애인 권익보호단체로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이제는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장애인단체의 모습을 규탄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장애인단체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본질의 목적을 찾아가는 장애인단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미판정을 받은 전복지체장애인협회장은 당장 도협회장직과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직을 사퇴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 선출과정과 운영, 회계처리등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복지체장애인협회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취소하고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을 접수 시 지역사회와 언론에 이를 알리고 공론화하여 공개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그 투명성을 담보하라!

하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사건이 발생 하면 사건의 사례와 조사상황, 결과 그리고 처분과 처벌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라!

2020년 8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8월 27일 배포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와 교섭을 시행하라**
**- 언제까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목숨을 내건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폭염과 태풍의 위험속에서 30m 철골 구조물 위에 3명의 노동자들이 10일째 목숨을 내건 고공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이며 (주)SMG에너지의 10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이테크건설에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테크 건설은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기업이다. OCI건설공사, 군장에너지 건설공사, 솔베이 건설공사 등 이테크건설이 군산지역에서 원청을 맡았던 공사 현장마다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으며 그때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와 투쟁으로 맞서왔음에도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고 고용을 빌미로 특정노조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기업 갑질이다. 가뜰이나 이중, 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군산시 소재의 기업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 등은 각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왔었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다각적인 군산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테크건설의 특정 노조 소속 노동자 취업 제한 행위는 군산시 경제 회복과 노동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반지역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라도 특정노조를 배제하는 행위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기업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의당전라북도당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명의 노동자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30m 철근구조물에서 내려와 무사히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테크건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성명] 9월 2일 배포

무기한 파업 강행하는 전북대·원광대병원 전공의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라!

지난 1일 도내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일부 전문의들도 집단 휴진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의대생들 역시 동맹 휴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현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 속에서 집단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당장 진료 거부 철회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이번 의사 파업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라도 2차 위기가 발생한다면 병상부터 부족해질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공공병원 병상 확충과 인력증원을 1차 위기 때부터 강조해 왔다. 2차 위기가 현실화된 만큼 정부는 뒤늦게나마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의사 인력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편중 또한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을 확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시급한 정책인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갖고 있진 못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파업과 더불어 도내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의사파업은 국민과 도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이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의사들이 해야 할 행동은 파업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오명만 남을 것이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가 공공의대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의사 파업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하여 도민들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OECD 가입 조건이었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관한 권고를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국정농단 사안 중 하나이자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촛불혁명 이후 밝혀지기까지 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직권취소가 아닌 대법원의 판결로 미룬 것은 유감이라 하겠다.

지난 7년간의 전교조의 고통을 위로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 합법화 뿐 아니라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 교사 원직복직 등의 요구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9월 4일 배포

의료공공성 배제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밀실야합 규탄한다! **-재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면 반영해야**

오늘 오전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이루었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국민의 의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배제한 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혁 논의를 후퇴시킨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합의의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향후 협의체 구성해서 원점 재논의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의료 질 개선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포기하고 만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논평] 9월 9일 배포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명의 전주시의원에게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차별금지조례)이 발의되었고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는 포괄적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며 전주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발의했다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본 전제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역시 전주시민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라는 의제를 전주시 전반의 영역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고 전주시가 차별금지 및 평등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 의원인 서윤근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듯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주시는 선진적인 인권 도시로서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듯이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주시의회 역시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시민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0년 9월 9일
정의당전라북도당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군산 이테크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 지부 노동자들이 발전소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5일째이다.

폭염과 태풍의 위험속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지난 6일, 한국노총 조합원과 용역들이 농성장을 강제로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렇듯 위협을 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언제까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목숨을 내건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테크 건설은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기업이다. OCI건설공사, 군장에너지 건설공사, 솔베이 건설공사 등 이테크건설이 군산지역에서 원청을 맡았던 공사현장마다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고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강력한 항의와 투쟁으로 맞서왔다.

한국노총에겐 부지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하고 한국노총 소속인 노동자들만이 일을 할 수 있다며 공공연히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현장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고 고용을 빌미로 특정노조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기업 갑질이다. 더구나 이중, 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 등은 각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왔었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다각적으로 군산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테크건설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취업 제한 행위는 지역 경제 회복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외면하

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음식물과 식수, 약품, 방한용품등이 제 때에 전달되어야 하며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를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필수 생존 물품을 반입하라고 했음에도 식수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라도 특정노조를 배제하는 행위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기업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의당전라북도당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명의 노동자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30m 철근구조물에서 내려와 무사히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테크건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테크건설은 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와 교섭을 시행하라!

이테크건설은 고공농성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년 9월 1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9월 11일 배포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

정의당은 9월 6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30일 당대회에서 일부 수정된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의 혁신을 추동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5인의 당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도당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장·지역위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9일, 10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하였고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들은 오늘(11일)부터 유세와 토론회 등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하여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라북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들 또한 이를 준수하며 온라인 선거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9월22일까지의 선거운동 일정이 마무리된 후 온라인 투표 9월23일~9월26일, ARS모바일투표(당대표·부대표선거에 한함)가 9월27일에 진행되고 전라북도당위원장 등의 개표는 9월26일 온라인투표 종료 후, 당대표·부대표 개표는 27일 ARS투표 종료 후 즉시 진행됩니다. 개표 결과는 정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정의당 혁신의 분수령이 될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9월 15일 배포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는
이스타항공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편법 승계,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에 460여명의 노동자를 감축한데 이어 지난 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 605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무급 순환휴직, 임금삭감, 체불임금 일부 포기 등을 통해 고용유지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를 거부하고 대량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대표직을 사퇴했다고는 하나 그의 자녀들이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를 설립해 자산 1500억여 원의 이스타항공 지분 약 68%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상황을 두고 편법 승계에 대한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오너는 이상직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직의원과 그 일가에 부실경영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하였고 매각 대금 챙기기에 급급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하였다.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 일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며 과연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상직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각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민주당전라북도당 또한 대량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상직 의원에게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60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성명] 9월 15일 배포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결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오늘(9월 15일) 오전에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전주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해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시민들을 대의하는 전주시의회는 마땅히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했으나 결국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를 수용했다. 시의회의 책무 유기이다. 더구나 발의에 동참했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부결에 참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여론이 88%를 상회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권고,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등 차별금지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한다.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을 울타리 밖에 세워둘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차별과 혐오를 막고 평등권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9월 24일 배포

이상직 의원은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해야

24일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곧 제명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사퇴로 이스타항공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금배지에 연연하지 말길 바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상직 의원을 악덕기업주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악덕기업주 이상직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무리한 컷오프를 단행하면서까지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 있는 공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우려와 의혹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공천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내몰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9월 26일 배포

제6기 정의당전라북도당 오형수위원장 당선

정의당전라북도당은 6기 지도부 선출을 위하여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00.0%를 득표한 오형수 후보가 정의당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인을 선출하는 부위원장으로는 한상구, 허옥희, 최장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 익산 권태홍, 전주 서윤근, 정읍 한병옥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 부대표 선출결과는 내일(27일) ARS투표를 마친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선투표 진행시 투표기간은 10월 5일(월)~ 9일(금)까지이며 선출 결과는 10월 9일(금)에 발표됩니다.

이번에 선출된 6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입니다.

2020년 9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9월 28일 배포

제6기 정의당전라북도당위원장 오형수 당선인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전라북도당 제6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오형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동안 노동존중과 진보정치의 한길을 숙명처럼 걸어왔습니다. 진보 정당과 정의당의 역사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성소수자, 다문화가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시대의 정의로운 가치를 선도해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미래 역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했었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해 낼 것입니다.

진보정당 첫출발, 첫마음으로 되돌아가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다 강해 지겠습니다. 진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의당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진보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팬더믹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제6기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함께 하면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삶에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활 진보정당으로 그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다가온 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인권문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역시 정의당의 중요한 가치이고 실천과제입니다. 정의당의 튼튼한 기초,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지역정치 사업을 발굴하고 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심각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떨어져 있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을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풍성한 명절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오형수

[논평] 10월 22일 배포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공공의사 인력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매우 유감.**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조 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대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인력 양성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며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했다고 한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공공병원 병상 확충과 인력증원 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광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어촌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다. 우리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6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전무하고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 역시 7개 지역에 이른다. 이러한 의료낙후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기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다.

도내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했지만 감염내과 전문 의는 물론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조차 없어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보살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심혈관센터가 도입됐지만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서 남원 인근 지역 급성 심장질환 환자는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의사 인력 부족은 지역에서 극심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장이 소수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수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열악한 도내 의료실태로 인해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의 절실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했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과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인력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도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의당전라북도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10월 26일 배포

한빛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대한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균열 가능성을 포함한 정밀 조사 실시하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전남 영광에 위치하고 전북 고창에 근접해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3호기를 재가동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 넘게 멈춰 서 있는 한빛 3호기를 재가동 하는데 있어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빛 3호기는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 124개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한빛 4호기의 140개에 달하는 공극을 합치면 전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 3. 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격납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 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 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번 구조 건전성 평가에는 공극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균열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빠져있다고 한다. 격납 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결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함임에도 공극에 대한 보수만으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빛원전 3호기에 대해 격납 건물 내부 균열부터 정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중요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 한빛원전 3호기가 멈춰 있는 동안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었고 전력 예비율 또한 25%~3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 건전성 평가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단 하나의 결함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한빛 3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수원은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구조적 결함에 대해 근본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완벽한 보수가 가능하지 않고 균열 가능성이 있다면 즉각 한빛 3호기에 대한 폐로 결정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과 도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불통과 무능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은 경기와 고용사정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전북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지역경제는 악화되어 도민들이 삶의 질 또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률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전북 정치권과 행정의 각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제조업 분야에서 20%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의 위기설이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은 요원하다. 이러한 가운데 만일 현대차와 타타대우마저 심각한 사태에 처한다면 전북은 경제위기가 아닌 경제재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손익 분기점은 5만 1천대인데 내년에는 4만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물량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코로나 19에 따른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처럼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의 모든 역량이 결집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중대형상용차는 국가필수산업이고 기간사업인 만큼 전북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주요 산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이 전국 상용차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타 지자체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

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계획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하다. 코로나 19로 더욱 힘들어진 상용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그린뉴딜 정책 중 상용차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정치권과 행정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청 미화·시설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원상회복,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청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원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임금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이 정부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북도청의 태도는 불통과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공동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도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거부하는 송하진 도지사는 하루빨리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권위주의는 행정 조직 뿐 아니라 지역 전체를 퇴보하게 만든다. 바로 적폐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송하진 도지사는 불통과 무능 행정 즉각 중단하라!
-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 미화·시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11월 02일 배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행보에 나서**

11월 2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이하 국회의원)가 전북을 방문했다.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과 도청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의당전라북도당 기자회견」 함께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주력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상용차산업 역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청취하러 왔다. 이후 국회에서 이 의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에서 발생한 시설 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의 임금하락에 대해서는 “임금하락이 수반된 고용안정은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 분명하게 실태파악을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전라북도당은 코로나 19에 따른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처럼 상용차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북의 모든 역량이 결집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공동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도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거부하는 송하진 도지사는 하루빨리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불통을 규탄하고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과 도청 미화·시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강은미 국회의원과의 현대자동차전주공장·타타대우·전북평등지부 노동조합과 간담회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용차 산업과 관련해서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들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타지자체들의 사례를 더 모아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로 돌아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후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5일째 단식 농성중인 정정수 전북평등지부 부지부장과 도청의 미화·시설 노동자들을 찾아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더 추워지기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힘내시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11월 13일 배포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전북대 초청 강연 열려

10월 13일(금),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전북대학교에서 ‘청년정치, 배수진 위에 세워지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더 권력이 적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다 찾아보고 거의 포기직전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화)에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청년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렵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의원은 “가만히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데 강력한 의미가 있다. 동료로 함께 해달라”고 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성명] 11월 19일 배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요구한다!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물어야 한다.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고 기업에는 있으나마나한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60억을 벌금 최대한도로 잡는다. 캐나다는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고, 삼성중공업 광공장에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다.

정의당이 이 법안에 집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다.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 정당에 요구한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 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대체 누구 눈치를 보기에, 무엇이 두려워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故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입법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전라북도당은 더 강한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11월 26일 배포

최영심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한 정병익 부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라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이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의회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와 최영심의 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병익 부교육감의 정당과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직업별, 분야별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만 모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논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의원의 전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혐오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현장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조합 출신의 의원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돌봄전담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병익 부교육감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최영심의원과 전라북도의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12월 10일 배포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관한
전북도 내 자영업자의 인식 설문조사결과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해**

- 전북도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기간 : 2020년 11월 16일~30일, 응답자 150명)
- 전북도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의무가입 찬성률 86.7%
- 전북도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 동의율 83.4%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시 본인부담률 1만원(100만원 당) 63.8%
- 빠른 시일내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75.3%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에서 「2020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명으로 작년 10월에 대비해 42만 1천명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일컫는 ‘비임금근로자’는 11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가 22만 7천명(전년동월대비 -9.9%),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가 18만 8천명(전년동월대비 -5.2%)이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과 휴·폐업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의 위기에 놓여있다.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된 지금,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31.4%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13.8%가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우선 입법 과제중 하나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입법발의 했다. 국가재난위기 속에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은 꼭 필요한 개혁입법방안이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95명이었으며 그 중 유효한 응답은 150명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86.7%)이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34.3%)이고, 두 번째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28.3%)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낮기 때문(20.2%)이었으며 답변 분포는 고른 편이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 사실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보험료는 임금근로자의 2배인데 비해 보장 금액은 차이가 없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비싸게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7%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의무가입 전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찬성률(86.7%)을 보였다. 본인부담률은 1만원(100만원 당, 63.8%)을 가장 적합한 금액이라고 답했고, 이렇게 적용될 경우 「전국민고용·소득보험」 가입에 83.4%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해당 안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지급 요건 완화,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자영업자들도 얼마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감염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처한 고용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막아줄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방식을 말하지만 민생현장에서는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국민’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전국민고용·소득 보험제’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보도자료] 12월 31일 배포

오형수 정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전라북도당 위원장 오형수 인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그동안 보건 선진국이라 불려져 왔던 서구의 많은 나라들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의 고통은 더욱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의 중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식당,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음이 정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고용구조가 취약한 전라북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의당은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21일째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은 그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종식되고,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며 소득은 골고루 분배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전북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함께 하면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삶에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활 진보정당으로 그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의 소중함을 서로 나누며 건강하고 활기찬 전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오형수

2) 조직사업

(1) 당원현황(2020.12.31.)

지 역	2019년 12월31일	입 당		탈 당		전 체	탈당현황(사유)
		입당 당원	지역위 변 경	탈당 당원	지역위 변 경		
고창	42	1	2	1	1	43	노선,정책갈등
군산	491	32	3	54	4	468	당의 기초와 불일치,본인이 생각하는 방 향과 맞지 않아서,
김제	180	3	0	13	3	167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음..지지정당변경, 피해호소 자의 편에 서는 일은 장래후에 할 수 도 있었다.
무진장	73	1	1	13	0	62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회의를느껴서 최근 당의 방침과 제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큼
부안	41	4	0	6	0	39	창피함, 지지철회 제발 진짜 정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당이 되길
완주	200	14	3	16	4	197	지지철회, 일부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 비례대표 선정결과 불만족(특히 1번)
익산	1,089	43	4	58	7	1,071	개인사정, 처음입당할 당시의 정책과 지향하는 목 표가 현재의 정책들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당의 방향성이 다른거 같아서.
남임순	278	8	3	91	2	196	지지철회, 요즘 정의당 행태에 환멸을 느낍니다.
전주	1,142	128	14	124	5	1,155	정의당은 정의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 였음.공직채용, 정치노선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당의 활동이 잘 맞 지 않습니다.
정읍	186	4	1	15	2	174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찾기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위원으로 추 천 받아
계	3,722	238	31	391	28	3,572	

지역	당비약정당원①		당권당원②		일반당원③		계①+③		당비납부 율(%)
	전월	현재	전월	현재	전월	현재	전월	현재	
고창	11	11	9	9	31	32	43	43	1.20
군산	202	202	165	162	266	274	468	468	13.10
김제	27	25	21	22	140	142	167	167	4.68
무진장	35	29	26	25	27	33	62	62	1.74
부안	22	20	21	21	19	19	41	39	1.09
완주	118	120	102	100	76	77	194	197	5.52
익산	581	567	529	517	491	504	1,072	1,071	29.98
남임순	99	42	76	73	136	154	235	196	5.49
전주	651	672	556	543	461	483	1,112	1,155	32.33
정읍	126	122	99	99	50	52	176	174	4.87
계	1,872	1,810	1,604	1,571	1,697	1,770	3,570	3,572	100

(2) 조직 활동

[1차 정치후원금 조직]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차례 캠페인
-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의장 면담 및 노조 상집회의 참여
-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농협노조, 언론노조, 보건 의료노조 협조 요청

[2차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기간 : 2020년 11월 20일~12월 4일

대 상 : 각 지역위원회, 임원, 당원, 민주노총 주요 노동조합

결 과 : 현재 215명 조직, 계속 조직 중

조직 현황 및 후원액은 차기 운영위 보고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 결과]

사업기간 : 2020년 11월 20일~12월 31일

대 상 : 각 지역위원회, 임원, 당원, 민주노총 주요 노동조합

결 과 : 총 정치후원금 304명 , 특별당비 11명

총액 : 30,150,000원(중앙당 20%, 처리비용 차감)+2,500,000원(특별당비)

3) 교육사업

(1) 신입당원교육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저녁 7시
- 장소 : 전북도당 당사
- 대상 : 2020년 1월 - 교육 시점까지 가입한 당원(약 170명)
- 주요내용

시간	구분	프로그램	진행
19:00~19:20	20분	당원-도당위원장 인사	김민아 사무처장
19:20~19:40	20분	정의당 소개	김민아 사무처장
19:40~20:40	60분	지역정치와 정당	서윤근 전주시의원
20:40~	-	멋다한 이야기	-

- 참석 : 15명 (신입당원 10명)

(2) 인권교육

- 일시 : 2020년 7월 4일(토)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회의실
- 대상 : 기존 인권교육 미수강자
- 주요내용

시간	구분	프로그램	진행
14:00~15:30	90분	성평등 교육	박인숙 강사
15:30~17:00	90분	장애평등 교육	정미정 강사

- 참석 : 28명(당원 24명, 비당원 4명)

(3) 당원연수

- 일시 : 2020년 5월 30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중부비전센터 가나안홀
- 대상 : 전 당원
- 주요내용

시간	구분	프로그램	진행
14:00~15:00	60분	(필수) 정치관계법 이해	임찬희 (선거담당관)
15:00~16:30	90분	제21대 총선 결과, 정의당의 과제는?	이병길 (전략본부장)
16:30~18:00	90분	포스트코로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참석 : 30명

(4) 활동가기본교육

▶ 1차 현장 교육

- 일시 : 2020년 10월 25일(일) 13시~20시 30분
- 장소 : 왕의지밀 컨벤션센터
- 대상 :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

- 주요내용

시간	구분	프로그램	진행
12:30 ~ 13:00	30분	등록 및 안내	사무처
13:00 ~ 14:00	60분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00 ~ 15:30	90분	정의당의 성평등 매뉴얼과 대처	배복주 부대표
15:30 ~ 16:50	80분	차별잇수다(토론형 교육)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50 ~ 17:50	60분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당원실천과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17:50 ~ 19:00	70분	6기 당 전략과 중점 사업	박인숙 부대표
19:00 ~ 20:30	90분	저녁식사	사무처

- 참석 : 39명

(5) 호남권 회계실무교육

- 일시 : 2020년 1월 17일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 대상 : 각 선본 회계담당자
- 강사 : 최경희 비서(심상정 의원실)
- 내용 : 선거 회계 실무
- 참석 : 12명

4) 홍보사업

(1) 정책현수막 제작 및 게시

- 내용 : 정치현안, 정책제안, 통과법안 등 다양한 사안으로 홍보 현수막 제작하여 전북 각 지역에 게시 총 수량 : 670장
- 주요 의제

내 용	수 량	비 고
설 인사+청년기초자산제	40	
시민선거인단 모집	95	
중소상인 위기, 함께 극복	121	
재난기본소득	39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71	
총선 인사	5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38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	

(2) 영상 제작 지원

-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함

(3) 정의공감

- 선거특별호 인쇄물 제작, 2,912부 우편 발송
- 국회의원선거 후 온라인 특별호(선거결과) 전자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 하반기에 분기별 발행을 하기로 했으나 진행되지 못함

(4) 현안캠페인

▶시민선거인단 모집

-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 민주노총 내의 산별 조직을 중심으로 모집 캠페인 진행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 반영 요구

- 1인 시위 (6월 29일~7월 3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 도내 대학가 중심 현수막 게시

▶차별금지법 제정

- 전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7월 9일, 도의회 브리핑룸)
- 지역위원회별 현수막 제작 게시
- 전북도당, 전주지역위, 정읍지역위 출근선전전 진행(7월 14일~17일)
- 지방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건의문
: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 발의하였으나 찬성 11, - 반대 22, 기권 3으로 부결,
군산시의회 정지숙의원 발의하여 만장일치 통과
- 차별금지법 관련 ‘나인권 전북도의원 혐오발언’ 대응 규탄성명 배포(7월 17일)

- 국회 국민동의청원 : 25,123명 동의로 청원불성립(8월 2일)
- SNS 인증샷+해시태그 게시 : 도당위원장 시작, 당원독려 필요(7월 27일)
-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연대사업)
: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동참 촉구,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전북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7월 29일)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 나인권 전라북도의원 징계 촉구 진정(8월 6일)
- 평등버스 전북일정 결합 : 2020년 8월 25일(화), 익산 거리캠페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주 거리캠페인 당원 결합(연인원 39명)
- 차별금지조례제정 환영 기자회견 : 2020년 9월 10일(목),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연대
- 전주시의회 조례제정촉구 피켓팅 : 2020년 9월 15일(화), 전주시의회 행정위 심의에 맞춰
피켓팅 결합, 상임위 부결
- 전주시의회 규탄 성명 발표 : 2020년 9월 15일(화)
- 피켓팅 :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8명 참석(12월 1일)
-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 전북 각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앞 1인 시위(12월 8일), 세계인
권선언 72주년 맞이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기자회견(12월 10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사업기간 : 11월 17~
- 사업내용 : 1차 지역위 별 현수막 게시
도당 출근 및 중식 선전전, 전주·익산·정읍 선전전 진행
2차 완주공단, 김제공단 현수막 게시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도당 임원 강은미원내대표 응원 영상 배포 및 당원들에게 응원 요청

(5)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설문조사 사업

- 설문조사 기간 : 2020년 11월 16일(월) ~11월 30일(월)
- 대상 : 전북도 내 자영업자(유/무고용)
- 방법 : 온/오프라인
- 사례수 : 총 응답자 195명 중 유효 응답자 150명
- 주요결과 : 전북도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의무가입 찬성률 86.7%

전북도 지역업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 동의를 83.4%

지역업체 고용보험 도입시 본인부담률 1만원(100만원 당) 63.8%

빠른 시일내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75.3%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

(6) 온라인실천단

- 당원 및 지인을 대상으로 실천단을 모집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해 당원 소통방을 활용함

(7) 라디오광고

-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정당홍보 라디오 음성 송출
- CBS전북방송,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주KBS 4개 방송사 총 145회

(8) 정당연설회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오후 4시
- 장소 : 전주 남부시장
- 목표 : 정책 홍보 및 당원가입 유도
- 내용 : 정책특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배포 및 시민 만남
피켓팅, 민심 청취

(9) SNS 운영

- 페이스북 운영, 트위터·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신설
- 주요 일정, 소속 의원 및 전북도당 기사·방송, 도당 보도자료 등 게시

(10) 카드뉴스 및 웹자보 제작

-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정활동, 총선 후보 공약 등 제작 지원

5) 총무사업

- ▶ 도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 관리
- ▶ 문서의 접수 및 발송관리
- ▶ 당원관리프로그램의 운영과 당원의 관리

- ▶ 2020년 4.15 총선 재정 지원 관리
- ▶ 2020년 결산 및 감사 준비, 예결산위원회 1월 중 개최
- ▶ 2021년 기초예산(안) 준비

6) 연대 사업

(1)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김병권소장 강연회 이후 기획팀(정의당전북도당,전국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

- 후속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함.

일시장소 : 8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회의실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

주 관 :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민중행동 외

토론주제 : 그린뉴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2) 이테크건설 부당노동행위 관련

강은미 원내대표 이테크건설 현장 방문 및 사측 고공농성 노동자 인권보장 요구

이테크건설 본사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노·합의 요구(9월 19일 합의)

이은주의원실, 이테크 관련 노동자에 무리한 구속 방침 전북경찰청 시정 요구

(3)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학대 사건

민관합동조사 요구

도당 장애인위원회 결함, 연대투쟁

장혜영의원실,이은주의원실 전북도청에 대책 요구

(4) 전북도청 노동 현안 문제 대응

- 11월 2일 10시,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과 도청 노동자 권리 보장 요구 기자회견

- 강은미의원(환경노동위)과 현자,타타대우,평등노조 간담회 진행

2. 2020년도 사업평가(안)

① 총괄평가

▶ 정의당은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괄적차별금지법,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비동의강간죄개정 5대 우선 입법 과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지역활동을 시작으로 대학등록금반환 활동 등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연말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의 성과로 이어졌다.

▶ 제6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당과 지역위원회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며 총 8개 지역위 중 4개의 지역위만 위원장이 선출되어 도당의 지역 강화에 대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후 지역위 간부 간담회를 진행하여 재선거 시기에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당 사업과 당원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으나 각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의 참여로 실천활동, 연대활동,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② 사업별 평가

1) 언론사업

논평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
28회	8회	9회	12회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일상적 연대, 사안별 연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당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요구받는 경우가 증가하여 당의 활동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당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대응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겠다.

2) 정책사업

지역의 노동, 여성, 환경,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당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진행하면서 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관한 그린뉴딜 관련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소장 초청 토론회, 민주노총 전북본부·강은미의원과 함께한 전북상용차산업의 위기와 대응을 위한 간담회, 대한방직부지 활용에 대한 도당 정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여 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의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나가야 하겠다.

3) 조직사업

2020년 12월 기준 당원 총수 3,598명으로 2019년 12월 기준 대비 50명 감소하였으며 당권자의 수는 같은 기간 241명 감소하였다. 21대 총선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를 겪으면서 탈당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하반기 허옥희 의원의 민주연합노조 조합원 입당 조직, 전주시위원회 당원확대 사업 등으로 신입당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과 지역 강화 사업이 당원 조직 사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말 정치후원금 조직 사업의 목표 달성은 그간 연대사업의 성과이며 이후 당원 조직 사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위원회 강화 사업으로 지역위원장 미선출 지역위(남인순, 완주, 무진장)와의 간담회를 통

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나 김제시위원회는 2016년 총선 집행부 탈당사태의 후유증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4) 교육사업

(1) 신입당원교육

상/하반기 각 1회씩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상반기 1회에 그쳤다. 대상자 약 170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소개와 함께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지역정치와 정당’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석했던 당원들 중 일부가 교육 이후 지역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지역위원회 교육 담당자를 양성하지는 못해 차후 과제로 남았다.

(2) 인권교육

기존 인권교육은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련 당규 변경 및 기존 이수자들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성평등교육(강사 박인숙)은 역할극 등을 통해 수강자의 참여를 유도해 호응이 좋았으나 장애평등교육(강사 정미정)은 강사의 시간배분이 미숙하여 다소 아쉬웠다. 그동안 인권교육은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이미 수강한 당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당원연수

연인원 30명이 수강한 당원연수에서 ‘정치관계법의 이해’는 다소 내용이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제21대 총선 결과, 정의당의 과제는?’ , ‘포스트코로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강의는 당원들의 관심사를 잘 짚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연수였으나 당원 참여가 저조하였고,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강연장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활동가기본교육

전북 단일로 진행한 활동가기본교육에는 전북도당, 지역위원회의 주요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 39명이 참석하였다. 기존의 1박 2일로 진행하던 교육이 하루로 줄어들면서

추가로 온라인으로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 전체이수율이 낮은 한계를 보였다.

(5) 호남권 회계실무교육

전북 소속 후보 선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가 호남권역으로 확대하였다. 총 12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최경희 비서(심상정 의원실)가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참석자 다수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해당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교육에 비해 회계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은 수요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채 급히 잡은 일정이라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6) 기타

매년 하반기에 열렸던 시민학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팬데믹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차후 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5) 홍보사업

(1) 정책 현수막 제작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알리기 위해 1~3월 현수막을 대량 게시하였으며, 총선 이후에는 정치 현안 및 발의 법안 등 다양한 사안으로 전북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청년기 초자산제, 시민선거인단 모집, 중소기업 위기·함께 극복, 재난기본소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이 있었다.

(2) 영상제작 지원

총선 지역구 후보들에게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 후보마다 선거운동방식이 상이하여 효율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3) 정약공감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후보를 안내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 홍보를 위해 선거특별호를 발행하였고, 총선 이후 온라인 특별호를 통해 선거 결과를 배포하였다. 하반기 2회 제작·배포 계획을 세웠으나 조기당직 선거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는 못하였다.

정의공감 인쇄물 배포의 경우 인력·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다른 형태의 소통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크다.

(4) 현안캠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전북도당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위별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11월부터는 전당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북도당을 비롯하여 전주·익산·정읍 지역위원회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차적으로 완주·김제 소재의 공단에 현수막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전북도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출번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역위별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 최영심 전북도의원 ‘차별금지법 제정 건의문’ 부결, 정지숙 군산시의원 ‘차별금지법 제정 건의문’ 통과, 서윤근 전주시의원 ‘차별금지 조례’ 상임위 부결 - 관련 조례·건의문 등 발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밖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연대사업을 통해 대시민 활동을 했다.

(5)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설문조사 사업

대중사업으로 중앙당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으며 설문 응답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약 2주간 전북도 자영업자 150명의 유효 응답을 받았으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의무가입 찬성률 86.7%, 도입 동의를 83.4%,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요구 75.3%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6) 기타

온라인실천단은 계획에 비해 참여가 저조해 기존의 당원 소통방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상시적인 여론 대응이 필요하다. 총선 직전에 한 라디오광고는 송출 기간이 짧아 아쉬움을 남겼으며,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SNS운영에 있어 당원 및 대중의 접근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콘텐츠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총무사업

- 도당의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문서의 출납, 당적관리 등 일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 일련의 사건들로 당원의 탈당이 많았음에도 꾸준한 당원 확대사업으로 신입당원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 부채상환계획을 세우고 정치후원금 모집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20년도 월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과 예산서에 따른 적정성을 보고 집행을 하였고 국가선관위와 도당 예결산위원회의 감사기준에 맞게 적정예산을 집행하였다.

안건2	2020년도 결산(안)승인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

주문사항 : 1. 2020년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감사보고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정의당 전북도당 규약 제13조 1항
2호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 2020년 결산(안)
[별첨자료1] 참조

감 사 의 견 서

「정치자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의당 전라북도당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05. 12(수) 18:30~20:30

나. 피감자 : (전)정광수 사무처장, 안봉순 총무국장

다. 감사대상

재산명세서 및 비품목록, 계절별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과목별수입부, 과목별지출부,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2. 감사의견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예산서와 세부집행내역 통장잔액, 집행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지역위원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전에 사무처와 공유하여 사업 및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라. 2020년 사업에 있어 선거기간에 예산이 집중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에 도당사무처, 운영위, 각 지역위 등의 조직 활성화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3. 특기사항 : 없음

2020년 05 월 12일

감 사 자

(직위) 예결산위원장

(직위) 예결산위원

(직위) 예결산위원

김형택

한병준

안부자

감 사 의 건 서

「정치자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2020년 05월0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01. 12(화) 19:00 ~ 21:00

나. 피감자 : 김민아 사무처장, 안봉순 총무국장

다. 감사대상

- 재산상황 및 비품목록, 결산총괄표, 일자별 수입지출 통장,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2. 감사의견 :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

가. 2020년 상반기 결산이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 확인되었
습니다.

나. 결산안과 세부집행내역 통장잔액, 집행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총선기간 회계처리에 있어 수입과 지출 항목을 부적합하게 처리하였음을
지적하며,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 차입금 상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반환금에 대한 처리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후위기와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매체보다는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치후원금 모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특기사항 : 없음

2021년 01월 12일

감사자

직 위 : 운영위원

성 명 :

한병준

직 위 : 운영위원

성 명 :

신명진


(인)

안건3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건

주문사항 : 1. 2021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21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정의당 전북도당 규약 제13조 1항

2호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호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호 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1. 2021년 사업계획(안)

1) 정세 전망과 사업방향

▶ 코로나19

- 2020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행 중
- 현재 백신개발 및 접종, 치료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선의 시나리오라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고용위기, 삶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회복기에도 'K자 회복'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피해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유행이 끝난 후에도 피해는 회복되지 않거나 가장 늦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 유행 이후 심화된 불평등, 고용위기, 삶의 위기를 해소할 진보적 정책 대안 제시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필요

▶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지방선거

-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수))가 연이어 진행됨.

➡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하나의 과정이자 국면으로 보고, 긴 시야에서 치밀한 준비와 대응 필요.

2) 사업기조

(1) 2022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당 태세로 전환. 지역위 강화, 후보자 발굴, 후보 및 활동 당원 교육, 홍보활동 등 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2) 코로나19 , 기후위기 상황을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함.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

(3)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4) 노동, 환경, 여성, 복지 등 지역 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당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3) 사업계획

(1) 2022 지방선거 준비

① 목표

- 전북 제1야당의 위상을 넘어 수권 정당으로서 위상확보
-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생중심의 대안정당으로서 위상확보
- 주요 지역 단체장 후보 및 광역, 기초 의원 후보군 발굴 및 출마
- 도내 도비례 및 최소 7개 지역 사·군비례 당선

② 사업계획

- 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후보발굴, 교육, 전략 수립 등)
-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당원 연수
- 후보 교육 및 선거 실무 교육(정치 캠프)
-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월별 사업 계획

월	사 업 내 용
3월	· 선거기획단 구성
4월	· 후보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5월	· 선거승리를 위한 당원 연수
6월	
7월	· 후보자 및 핵심 활동가 정치 캠프
8월	
9월	· 후보 및 핵심 활동가 선거 실무 교육
10월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도당 당원한마당
11월	· 지방선거 핵심공약 수립을 위한 토론회
12월	

(2) 부서별 사업 계획

1. 언론사업

1) 사업목표

- 지역 여론 형성에 적극적 대응과 영향력 강화
- 다양한 분야,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대응

2) 사업계획

- 현안에 대한 상시적·지속적인 대응
- 지역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과 가치 등 적극 대응
-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전라북도 주요 언론사와의 관계 형성
- 지방선거 관련 언론대응 실무 교육 진행

2. 정책사업

1) 사업목표

- (1) 정의당 정책 비전 수립을 통한 정책정당 위상 정립
 -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한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 관련 전북 주요 정책 개발
 - 2022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의제 개발
- (2) 지역 정책활동 강화 방안 마련
 - 2022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시·군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제 개발
 - 지역 정책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
- (3) 지역 정책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정책역량 강화
 -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정화를 통해 정책의제 개발 기반 제고
 -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주제별 세미나, 회의 운영 등으로 정책역량 풍부화

2) 사업계획

- (1) 지역 정책활동 기반 구축 및 강화
 - 전북형 그린뉴딜의 방향과 내용, 코로나19 시대 전북 주요 의제 등 정책 토론회 개최
 -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 2022년 지방선거 대비
 - 지방선거 핵심 공약 발굴,
 - 전북 선거구 개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방선거제도 대응
 - 시민사회단체와 정책 연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3. 조직사업

1) 사업목표

- 미선출 및 사고 지역위원회 정상화
- 300 신입 당원 조직, 활동 당원 확대
- 지역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 당 지지 강화 및 확대
- 당원 소모임 활성화

2) 사업계획

- 지역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2022지방선거 승리 결의 및 지역위 강화 방안 모색
- 미선출 및 사고 지역위에 대한 간담회 진행
- 당원한마당 등 전당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당원 간의 소통과 단결을 도모함.
- 중앙당과 연계하여 각종 소모임 조직 및 활성화

4. 교육사업

1) 사업 목표와 방향

- 당 정체성 강화를 통한 당원의 정치적 의식 고양
- 활동당원 양성 및 지역정치 역량 강화
- 2022년 지방선거 준비

2) 기본교육

(1) 활동가기본교육

- 현장집체교육(권역별, 1박2일)과 온라인교육(당 홈페이지) 병행
- 시기 : 9월~11월 중 중앙당과 일정 협의 후 진행(오프라인), 11월~(온라인)
- 대상 : 지역 및 현장 당활동가
- 주요 내용
 - ① 2021년 한국사회와 정의당
 - ② 2021년~2년 정의당의 핵심과제
 - ③ 성평등 심화교육
 - ④ 장애평등 심화교육

(2) 인권교육

-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은 활동가 심화교육과 겹치므로 인권 감수성 중심 교육
- 노동인권·청소년인권 관련 교육 고려
- 시기 : 6~7월 경
- 대상 : 일반당원

- 주요 내용

- ① 성평등교육
- ② 장애평등교육
- ③ 노동인권교육(또는 청소년인권 교육)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

(3) 신입당원교육

- 신입당원들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당 활동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 조직 사업으로의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2회 진행을 기본으로 하
되 어려운 경우 광역 시도당 주관
-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신입당원 교육 매뉴얼과 기본교안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위원회별
교육담당자 교육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예정) 적극적으로 활용
- 시기 : 연중
- 대상 : 신입당원
- 주요 내용
 - ① 정의당 깊게 알기
 - ② 강령의 이해
 - ③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
 - ④ 당 기본 정책 해설

(4) 당원연수

- 지방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선거연수원 지원 활용
- 시기 : 5월 경
- 대상 : 전당원
- 주요내용
 - ① 정의당과 지역정치활동
 - ②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개발

3) 지역정치 역량강화 교육

(1) 지방선거 아카데미

- 202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및 참모 발굴 및 지원
- 교육연수원·지역정치본부와 연계하여 교육
- 시기 : 8월~9월
- 대상 : 출마예정자 및 활동당원
- 주요내용

- ① 지방자치 기능교육
- ② 선거전략
- ③ 공직선거법 교육
- ④ 선거회계실무

(2) 당직자 직무교육

- 부문위원회 및 도당·지역위 당직자 직무 능력 향상
- 민생상담 기초 능력 고양
-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실시
- 시기 : 3월~
- 주요내용

- ① 홍보 분야 : 웹포스터/SNS 활용 등
- ② 오피스 실무 분야 : 한글, 엑셀 실무 등
- ③ 보도자료 및 논평 실습
- ④ 일반/갑질 민원 상담
- ⑤ 법률기초지식

5. 홍보사업

1) 사업 목표와 방향

-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심도 제고
- 당 소식·의정활동 등 정보 전달 체계 개선 및 안정적 지원

2)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이슈별 기획영상 제작 및 배포
- 접근성 확보를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
- 주요 내용
 - ① 정치이슈/지역현안 브리핑
 - ② 정책 Q&A
 - ③ 주요 의정활동(대표 발의, 5분 발언)
 - ④ 도당 및 지역위원회 동정
 - ⑤ 당원 소식

3) 홍보 플랫폼 개선

- 기존의 인쇄물 정의공감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환
- 가시성 좋은 카드뉴스 제작 : 지역소식 위주
- 일정한 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SNS 구독률 향상

4) 당 주요 행사 홍보 지원

- 당 주요 행사 및 연대 시 촬영지원을 통해 콘텐츠 활용 및 기록자료 확보
- 출마예정자, 당 활동가 사진 및 영상 지원

5) 현안캠페인

- 전국/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당적 행동 계획 수립 및 당원 독려
- 홍보물(현수막, 피켓, 유인물) 제작 지원
- 성과 및 결과 정리 및 홍보

6. 연대사업

1) 사업목표

-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강화로 당의 대중적 기반 확대 및 공고화
- 민주노총전북본부를 포함한 지역 노동계와의 정례적 소통구조 구축
- 노동, 여성, 환경, 복지 등 관련 단체의 주요 요구 정치화 및 유기적 관계 구축

- 시민사회단체와 중앙당, 의원단 간의 연계와 대응력 강화

2) 사업계획

(1) 지역 단체와 안정적 소통구조 구축 및 안정적 운영

- 소통구조는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구축
- 도당 부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구조 구축

(2) 도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사업 발굴 및 진행

- 당의 주요 사업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진행
- 지역 주요 의제, 시민사회단체 요구 등을 중앙당, 국회의원 등과 연계 강화

(3) 노동 연대를 통한 조직 강화 사업

-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과의 일상적 연대와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
- 단위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 당원 조직 사업 진행

7. 총무사업

1) 사업 목표

- 당 재정의 안정적 운영
- 당원확대 사업 (년 700명 정도) 1일 2명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의 당원확대, 노동조합 집단가입 조직
- 당원정보 DB구축 사업
2021년 12월까지 지역위와 협의 후 순차적으로 당원 이력 관리
- 당비 장기미납이면서 SMS 거부 당원들에 대한 1:1 접촉과 요청, 활동 의지가 없고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들 확인 정리하여 당비납부율을 높임

2) 사업계획

- 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관리
- 일상적 회계업무의 안정적 처리
- 문서수발 및 일상자료의 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
- 각 지역위원회와 부문위원회의 활동 지원

- 사무처 출장 및 근태 관리

3) 재정 사업 계획

1. 중앙당 재정 적자 구조
 - 부채 43억원
 - 일상적 재정 적자 매월 약 1억 3천만원 연 15억 6천만원 누적
2. 일상적 재정 적자 해소 대책 : 일년 기준 총 14억 5천 4백만원
 - 1) 수입증대 방안 : 일년기준 총 7억 3천 6백만원
 - 당비 배분비율 조정 : 당비(5)를 중앙당2: 시도당8로 조정
(일년 기준 약3억 9천 6백만원)
 - 후원금 배분 비율 조정 : 후원금을 중앙당 2: 시도당8로 조정
(일년 기준 약 1억 4천만원)
 - 경상보조금 증액분 중앙당 사용 (일년 기준 약 2억원)
 - 2) 지출축소 방안 : 일년기준 총 7억 8백만원
 - 유급당직자 TO 80% 유지(일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
 - 사업비 10% 축소 (약 9천 6백만원)
 - 문자 사용 축소(일년기준 약 6천만원)
 - 업무지도비 80% 축소, 근조화환 축소(일년 기준 약 3천만원)
 - 전국 현수막 지원 폐지
3. 전북도당 영향
 - 이에 따라 기존 전북도당에 내려오는 당비는 평균 월 9,200,000원(1~6월분)
(도당 4,140,000, 지역위 5,060,000원)에서 월 2,900,000원 감소

(1) 당권자 탈당과 당비 납부자 감소로 당비 수입 축소

-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탈당사태로 당비 수입 감소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이체로 납부에서 직접납부로 전환하는 당원수가 증가하면서 당비수입이 축소

(2) 당원 및 당권자 확대, 당비납부를 증대

- 2021년말까지 전북도당 10%를 당권자 목표로 할 경우 현재 1,553명 당권자로 향후 약 540명 정도 추가 입당 또는 당권자 확대.(4월부터 하루 2명 × 9개월=540명)
예시) 월평균 3,000,000원 × 9개월 = 27,000,000원
- 현재 당권자 비율이 43.80%이므로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
- 당비 미납 당원들 확인 정리

(3) 당비납부를 제고계획 (목표 : 60%)

- 현재 납부율 : 49.53% (총당원 3,545명/1,758명)
- 목표 증가율 : 10.47%

(4) 일반당비 인상계획

- 당비를 더 납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 현재 당비 1만원 미만 당원은 약18%. 1만원 당원은 약80%로 절대 다수를 차지.
- “당비 2만원으로”, 당비인상활동 연내 순증가 월10명 목표 (중앙당 사업에 동참)
당원 확대와 동시에 당비 인상 캠페인 진행 (당비인상 메시지/ 당원대상 문자 호소영상 등,
당비월 1만원일 경우 세액공제시 실제 연 당비납부액은 2만원인 점 병행 홍보-중앙당)
※ 현재 일반당비 2만원 이상 납부당원 46명

◎ 참고자료:납부방법별 납부율(2020.12 기준)

납부방법	CMS	신용카드	휴대폰	직접납부	합계
당원수(명)	1,641	71	128	1,767	3,607
납부방법별 비율(%)	45.49	1.97	3.55	48.99	100%
납부자수(명)	1,489	28	77	9	1,603
납부율(%)	90.74	39.44	60	0.50	44.44
미납자수(명)	152	43	51	1,758	2,004

8. 부문위원회사업

○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1)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당 내외 인사로 정책위원회 구성(5명 이상 9명 이내)
- 운영 : 분기별 1회(분기말) 정례회의

2) 정책간담회

- 시기 : 현안 발생으로 필요시
- 참석대상 : 시안별 정책위원 또는 당 간부나 당원

3) 정책개발

- 전라북도와 시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 2022 지방선거 공약(정책) 개발

○ 노동위원회 사업계획

1) 목표

- 노동 현장과 당을 연계하는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 노동 현안에 대한 당 대응력 강화
- 노동자 신입당원 조직 및 2022 지방선거 출마자 발굴
- 당의 노동전략 사업과 노동정책 재정비

2) 사업계획

- 지역 노동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 노동자 당원 입당 사업을 위한 조직, 홍보 사업 진행
- 투쟁사업장 지원 및 연대
- 전북 노동현안 문제 대응 및 노동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 및 교육

○ 민생위원회 사업계획

1) 정세

-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주거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주거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 재난의 피해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삶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
-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이 논의되고 있으나 먹거리, 농어민의 삶이 배제되는 방식임

2) 3대 사업 방향

- 주거권,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농어민·먹거리문제 등 3대 의제 중심 사업 추진
- 아래로부터 당원 중심·현장중심의 민생사업 추진
- 지역 및 현장과 밀착된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

3) 주요 사업

(1)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활동 등 각종 보호 및 지원
- 공공배달, 온라인플랫폼,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착을 위한 활동 추진
- 도당, 의원, 출마자를 중심으로 민원 상담 및 지원활동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와의 연대 강화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

- 민생센터와 연계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 청년가구, 1인가구, 주거 세입자 등 주거약자들을 위한 활동 및 조직화 지원
- 주거세입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그룹과 연대 강화

◎ 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1) 목표

-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과 연대 강화
- 문화예술단체의 성평등 및 갑질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도당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문화콘텐츠 개발

2) 사업계획

- 문화예술 정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
- 지역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2021 지방선거 문화예술 공약 개발

◎ 성소수자위원회 사업계획

월	주	기조	내용
2021년 01월		당 내외 네트워킹 및 의견 수렴	- 전북 성소수자 당원 전수조사 - 전북 성소수자 (예비)당원 미팅
2021년 02월	1주차	성소수자위원회 홍보 및 정보 공유	- '명절 성소수자 혐오 발화' 카드뉴스 발행
	3주차	성소수자 당원 간 친목	- '2021 설날 후폭풍 털어내기' 모임
	4주차	당 내외 네트워킹 및 의견 수렴	-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비대면 미팅 - 전북 성소수자 단체 간담회

2021년 03월	2주차	당원 인식개선 및 교육	- 전북 당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2021년 04월		인식개선 및 교육	- 전주완산경찰서 경찰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2021년 05월		지역단체 연대	- 전주퀴어문화축제 참여
2021년 06월	3주차	당원 네트워킹 및 의견 수렴	- 전북 성소수자 당원 전수조사
	4주차		- 전북 성소수자 당원 전수조사 - 전북 성소수자 (예비)당원 미팅
2021년 07월	4주차	지역단체 연대	- 전북 성소수자 단체(전주퀴어문화축제 등)와 협 업하여 당원 및 시민 대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연
2021년 08월	4주차	당원 및 시민 성평등 교육	- 성평등 낭독회(닷페이스 문의 필요)
2021년 09월	3주차	성소수자위원회 홍보 및 정보 공유	- '명절 성소수자 혐오 발화' 카드뉴스 발행
	5주차	성소수자 당원 간 친목	- '2021 추석 후폭풍 털어내기' 모임
2021년 10월		성소수자위원회 홍보 및 행사	- 한글날 기념 '성소수자 용어 누가누가 잘 해석 하나'

2021년 11월	2주차 4주차	성소수자 당원 간 친목 및 공부 소모임	-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교차성 페미니즘 공부
2021년 12월	5주차	2021년 성소수자위원회 평가	- '올 한 해도 고생했어' 모임

○ 청년·학생위원회 사업계획

1) 청년·학생위원회 구성

(1) 청년 ·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약력	비고
한상구	현) 전북도당 청년 · 학생위원장	당연직
이찬영	현) 전북도당 전국위원	당연직
서효정	현) 전북도당 대의원(전주)	당연직
-	현) 전북도당 대의원(익산)	당연직
-	현) 전북도당 대의원(군산)	당연직
임형준	현) 전주시위원회 청년위원장	당연직
김은아	현) 청년 · 학생위원회 사무국장	당연직
고정민	현) 전북도당 예비당원	
박선희	현) 전북도당 교육홍보국장	

※ 추후 운영위원회의 추가 선임 · 교체 가능성 있음

(2) 청년·학생위원회 사무국 구성

직책	이름	약력
사무국장	김은아	전북도당 전주시위원회 당원

※ 추후 사무국원의 추가 선임 · 교체 가능성 있음

2) 청년·학생위원회 사업계획(안)

(1) 청년·학생위원회 목표

- 청년 현안 및 의제 대응, 관련 시민사회운동 연대
- 기초자치단체별 청년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 건설
- 각 의제 · 과제별 담당자 배정 또는 분과 건설
- 청년정의당에 대한 당 내외 인지도 및 관심 제고
- 청년정의당 전북도당 창당

(2) 청년·학생위원회 사업기조

- 청년 및 학생 당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 청년당원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
- 타 정당 청년조직 및 관련 시민사회운동과 네트워크 형성
- 청년정의당 창당까지 청년세대의 책임정치 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마련

(3) 청년·학생위원회 사업(안)

① 청년 · 학생위원회 사업 세부내용

■ 청년당원 조직화

○ 청년당원 현황조사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여부, 전북도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청년정의당에 대한 관심도 등 간단히 전화로 조사한다.

○ 전북 청년당원 간담회

청년 당원 현황 조사를 토대로 청년 당원이 심층적으로 원하는 사항과 더불어 청년·학생위원회(또는 청년정의당)에 대해 설명하고 같이 함께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 전북 정당 및 청년단체 간담회

각 정당의 청년 조직과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및 단체들을 만나, 청년·학생위원회(또는 청년정의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청년·학생위원회(또는 청년정의당)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연대와 당원 조직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 의제 · 과제별 분과(또는 소모임)

청년 본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의제 또는 과제별로 분과나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소한 1개 이상의 분과나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 의제 대응 및 기획사업

○ 우리동네 청년전문가

- 의제별 전문성을 가진 당원 혹은 비당원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청년·학생들에게 각 의제에 대해 인식,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진행되며, 각 회차 별 진행 시간은 5 ~ 10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 청년 · 학생위원회 교육사업

○ 청년 당원 교육

당의 현안 및 이슈를 공유하고, 정당 및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당원 교육을 실시한다.

■ 청년 · 학생위원회 홍보사업

○ 카드뉴스 발행

지속적인 카드뉴스 발행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카드뉴스에는 청년·학생위원회(또는 청년정의당)의 소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별 뉴스(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 부결, 낙태죄 폐지 등)를 준비하고자 한다.

◎ 청소년위원회 사업계획

1) 개요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지난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발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하반기 동안 활동하였다. 또한, 당대표 직속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건설됨에 따라 이

에 발맞춰 활동하였다. 2020년에는 추후 인준될 중앙당 청소년위원회의 지역주체로서 함께 준비하며, 청소년 당원 모집, 전북도당 청소년 당원의 활동 공간 확보,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청소년을 대변하는 기구로 발전하고자 한다.

2) 활동계획

(1) 위원회 재정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회칙제정과 위원회 조직체계 구축으로 2021년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을 준비하고자 한다. 회칙 제정과 조직 체계 구축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회칙은 본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 비전 등을 제시하는 가장 큰 틀이다. 청소년위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대변하는 목소리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제시하는 회칙 제정을 완료하고자 한다. 또 회칙이 완성되었다면 그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당헌과 당규, 그리고 추후에 인준될 중앙청소년위원회의 규칙을 기반으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활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2)도내 청소년 현안 점검

탈학교 청소년, 현장 실습생, 청소년 노동 등 도내의 청소년 현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의제를 연구하여 도내 청소년 현안들에 대하여 논평, 성명 발표 등의 공보 사업으로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3)홍보 사업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사업 홍보를 통해 당 밖의 청소년을 당원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의당과 함께할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위원회 사업계획

월	사 업 내 용	진 행 사 항
3월	편의시설(음식점,편의점 등) 실태조사 및 개선 제안	* 지역별/당원별 조사 * 점검반(구성)상시조사
5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직선제 관련	* 당원별 조사샘플 10매씩

	여론조사 및 기자회견	조사 * 전북도청기자회견 (현수막제작)
7월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지 발간 (6p 분량) -지역사회복지시책및정부시책안내(음성안내“보이스아이”기능추가)	* 소속 장애위원회 당원 배포 * 우편발송비용 필요
9월	올바른 장애인 주차장 이용을 위한 SNS 홍보 릴레이	* 당원별 SNS를 통한 온라인홍보
10월	당원모임 - 무장애 숲길 탐방 『숲과의 만남』	* 도시락 지참 후 개인별 집합 * 간식준비(떡,김밥등)
12월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정책 간담회	* 의료인+정치인+장애인단체 +당원 (커피, 다과 준비)

2. 2021년 예산(안)

[별첨자료2] 참조

[참고자료 1]

정의당 전북도당 규약

2012.10.18 전북도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2013.09.26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04.15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12.09 통합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전라북도당’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제2조 (목적)

정의당은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도당은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위원회를 시·군에 두되, 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당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 (당비)

-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9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 ①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당의 대의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청년 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청년당원 10% 이상 실현 방안과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포상과 징계)

-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11조 (당원 총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결정
 -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 ② 당원 총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도당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6. 도당 소속 전국위원
7. 도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②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도당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권한)

① 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도당의 규약에 따른 권한

제14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도당위원장이 맡는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도당 운영위 의결과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도당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최고 집행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도당 소속 전국위원
4. 국회의원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상설부문위원장

② 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도당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당 부문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신설]
8. 도당 규칙의 제정과 개정
9.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기타 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임 원

제16조 (임원의 구성과 권한)

① 도당위원장은 1인, 부위원장은 3인으로 한다.

②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사무처

- ① 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사무처의 당직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장 당기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며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도당 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며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8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0조 (지위와 구성)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년2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도당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9장 지역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 (당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 3. 중앙당 대의원
 -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 2.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 3.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24조(대의원 대회)

-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0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 ③ 단,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결정으로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10장 공직선거

제26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 ②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 ③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제27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제28조 (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제29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제30조(공직후보자의 인준)

-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12장 기 타

제31조 (재정)

-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32조(예산과 결산)

-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 보 칙 >

제33조 (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청산)

- ① 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②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3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2년 10월18일 도당창당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직장위원회)

당헌 제10장,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제4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제5조 본 규약 제정·발효 이후 중앙당 당규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중앙당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제6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 ① 2015년 11월 22일 중앙당 통합 당대회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전북도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1인, 전북도당 대의원 20명을 통합 정신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
- ② 전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전북도당 대의원은 관련 당헌과 전북도당 규약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및 대의원으로서의 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지역조직의 경우 관련 당헌, 당규, 전북도당과 지역조직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의 구성과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위원장의 인준은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④ 기타 통합에 따른 전북도당 및 지역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의거한다.